

CNI세미나2019-071

충남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집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2019.08.13

| 주관 | 충남연구원 · 충청남도

| 주최 | 한국지역경제학회 · 전국혁신도시포럼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개최계획

1 세미나 개요

○ 목 적

- 충남혁신도시 지정 등 충남지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때 · 곳 : 2019. 8. 13.(화) 14:00 ~ 17:50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주 관 :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 주 최 : 한국지역경제학회, 전국혁신도시포럼

2 진행계획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4:00~14: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개회사: 윤황 원장(충남연구원) - 인사말: 고영구 회장(한국지역경제학회, 극동대학교) - 기념촬영 	사회 충남연구원
강 연			
14:20~15:0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강연 ▶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공간 구상 	이민원 대표 (전국혁신도시포럼, 광주대학교)
15:00~15:2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1 ▶ 혁신도시 시즌2 현황과 과제-강원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홍길종 교수 (강원대학교)
15:25~15:5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2 ▶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중부권 연대발전 방안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15:50~16:1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3 ▶ 혁신도시의 과제와 발전방향-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하여- 	송부용 선임연구위원 (경남연구원)
16:15~16:2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 	
종합토론			
16:25~17:45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자(가나다 순) <p>모성은 원장(한국지역경제연구원), 박성훈 교수(조선대학교), 안기돈 교수(충남대학교), 엄수원 교수(전주대학교), 엄창옥 교수(경북대학교), 우 경 교수(김포대학교), 이근재 교수(부산대학교), 장동호 과장(충청남도), 정운선 부연구위원(산업연구원), 진종현 교수(공주대학교), 홍기용 원장(국제지역개발 연구원)</p>	좌장 양오봉 교수 (전북대학교)
17:45~17:5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공간 구상

이민원 대표
(전국혁신도시포럼, 광주대학교)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공간 구상

충남연구원

2019. 08. 13

이민원(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

목 차

- 1 제1부 혁신도시 점검
- 2 제2부 혁신공간의 새구상

제 1 부 혁신도시 점검

목 차

1 혁신도시의 현주소

2 혁신도시 목표 달성 점검

목 차

1 혁신도시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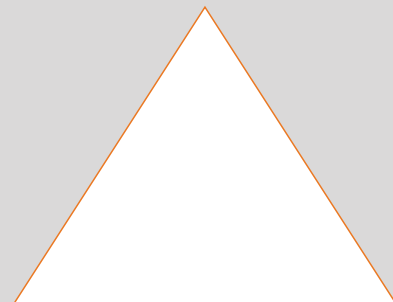
1.1 혁신도시 3대 과제

1.2 혁신도시 3대과제 동시 달성 불가능과 돌파구

혁신도시 3대 과제

- 산업: 4차산업의 전진기지
 - 새로운 산업의 창출
 - 미래 산업의 창출
- 공간: 성과의 타지역 확산
 - 주변 지역과 상생
 - 성공 모델의 전파
- 사람: 미래형인재의 보고
 - 미래 산업에 맞는 인재 양성
 - 미래형 인재 유인

● 산업
4차산업의 전진기지



● 공간
타지역으로 성과확산

● 사람
혁신인재의 보고

3대과제 동시달성 불가능과 돌파 방향

- 불가능1
 - 4차산업의 전진기지와 타지역으로 성과확산 추구
 - 결과: 4차산업전진기지를 추구하면서 타지역으로 성과확산을 동시에 추구하면 혁신도시내에 인재 유인은 포기해야 함
- 불가능2
 - 4차산업의 전진기지와 미래형 인재의 보고 추구
 - 결과: 4차산업전진기지를 추구하면서 인재 유인을 달성하려면 타지역으로 성과확산을 포기해야 함
- 불가능3
 - 미래형인재 보고 추구하고 타지역으로 성과확산 동시 추구
 - 결과: 지역 혁신도시내에 인재유인책을 실시하면서 타지역으로 성과확산을 추구하면 4차산업의 전진기지 구축 단계에 이르지 못함
- 불가능 돌파 방향
 - 혁신도시 시즌2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격상
 - 혁신도시 공간을 확장하는 국토 재디자인 필요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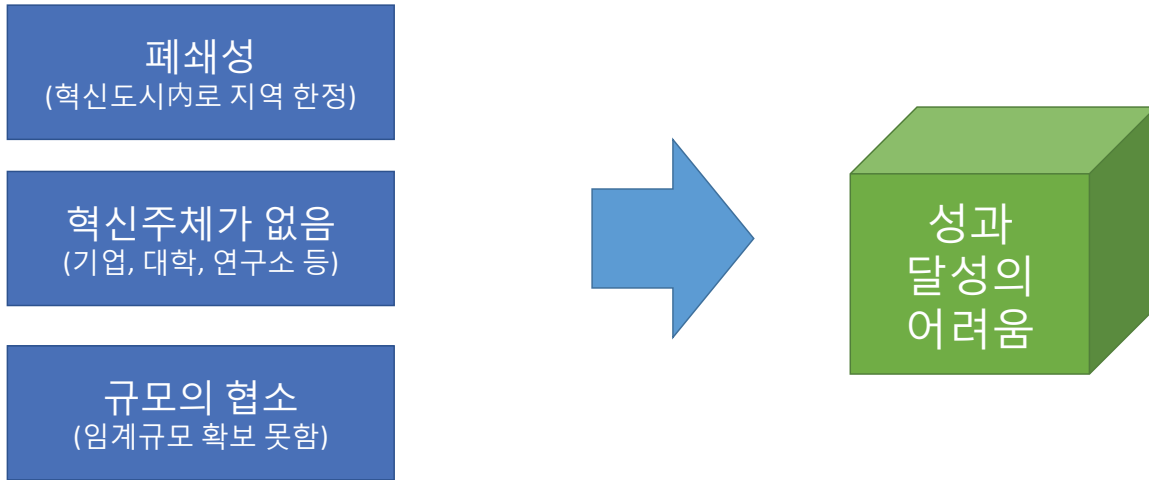
2 혁신도시 성과 점검

2.1 성과 달성의 어려움

2.2 해결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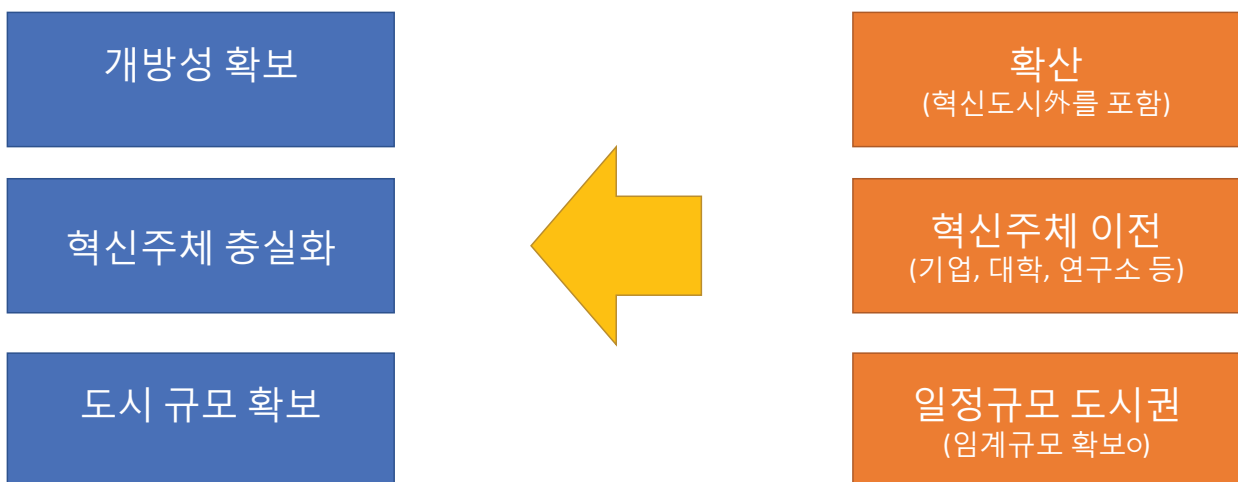
2.1 혁신도시 성과 달성의 어려움

2. 혁신도시 성과 달성 점검



2.2 해결책

2. 혁신도시 성과 달성 점검



제 2 부 혁 신 공 간 의 새 구상

목 차

-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 확대
- 2 혁신도시 외부로 기반 확충
- 3 새로운 혁신공간 구상

목 차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 확대

- 1.1 추가이전 검토 대상 기관
- 1.2 이전 지원 방안
- 1.3 이전 절차

1.1 추가이전 검토 대상기관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확대

가.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 (제18조)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1 추가이전 검토 대상기관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확대

나. 이전대상 기관

전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1차 잔류기관 재검토)	투자 및 출자회사
489개	210개	?개	279개

15

1.1 추가이전 검토 대상기관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확대

나. 이전대상 기관

❖ 공공기관(210개)

이전기준

- A.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대상(508개, 2018년기준)
 ※ 공기업(35), 준정부기관(93), 기타(210), 공직유관단체(170)
 B. 법령에 의한 잔류결정 및 잔류예정 기관 제외(46개)
 C. 수도권 이외 지역 공공기관 및 기지방이전 기관 제외(252개 기관)
 ※ 이전공공기관수(210) = A(508)-B(46)-C(252)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계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210개	1 개	3 개	22 개	86 개	98 개

16

1.1 추가이전 검토 대상기관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확대

❖ 공공기관(210개)

이전대상 공공기관(1)

IOM이민정책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정공제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극단(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발레단(재), 국립오페라단(재), 국립합창단(재), 국립현대무용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방전직교육원, 국외소재문화재단, 국제금융센터(사),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제원산지정보원(재), 국제입양원(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군인공제회, 극지연구소, 금융감독원, 노사발전재단, 녹색기술센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재), 대한결핵협회, 대한노인회(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산업안전협회(사),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목재문화진흥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명진흥회, 방수문화진흥회, 방송통신위원회, 법령정보관리원, 별정우체국연공관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시설관리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언론중재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재), 우체국금융개발원(재), 우체국물류지원단(재), 우체국시설관리단(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사),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라북도물관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재), 정부법무공단, 정부법무공단, (주)SBC인증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연구원(재),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중앙자활센터, 지방공기업평가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1 추가이전 검토 대상기관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확대

❖ 공공기관(210개)

이전대상 공공기관(2)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재),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방사선진흥협회(사), 한국방송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생산성분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초어항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재), 한국에어트비치연맹,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재), 한국여성발명협회(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은행,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잡지협회(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재), 한국장애인개발원(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통대학교교육협의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증권금융(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투자공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재),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한국폴리텍(학교법인), 한국표준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재),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희귀질환의약품센터, 한식진흥원(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재), 해양안전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외건설협회

1.1 추가이전 검토 대상기관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확대

나. 이전대상 기관

❖ 공공기관(210개)

지역별배치 참고: 기존 혁신도시 배치 기준 및 산업현황

지역	내 용
부 산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대 구	산업진흥, 교육 학술진흥, 가스산업
울 산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경 북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경 남	주택건설, 중소기업지원
광주전남	전력산업, 정보통신, 문화예술, 농업기반
전 북	농업생명, 국토개발
강 원	관광, 생명건강, 자원개발
충 북	정보통신, 과학기술, 인력개발
* 지역별 배치 결과는 생략합니다. 세 주	국제교류, 교육연수, 공공서비스

1.1 추가이전 검토 대상기관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확대

나. 이전대상 기관

❖ 1차 잔류 공공기관(170개) 재검토(?개)

당시 (2005.6.24) 잔류기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 수도권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매립지역에 소재한 기관
 - 수도권주민의 문화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 수도권 안에 소재한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철도역, 공항등을 관리하는 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기준
 - 이전비용이 기대효과에 비해 현저히 큰 기관
 - 민간성격이 강하여 이전강제가 곤란한 기관
 - 동북아경제중심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
 - 수도권입지의 고정성, 상징성이 큰 기관
 - 지방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 있는 기관

1.1 추가이전 검토 대상기관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확대

나. 이전대상 기관

❖ 1차 잔류 공공기관(170개) 재검토(?개)

상황의 변화로 재검토 필요성 발생

- 관할부처의 세종시 이전
- 이전비용의 절감 가능성
- 수도권 입지 상징성 쇠퇴
- 민간성격의 기관도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전 필요성 제고
- 혁신도시의 기능 제고로 혁신도시로 이전이 더 적합한 경우

1.1 추가이전 검토 대상기관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확대

나. 이전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회사(279개)

이전기준

- 수도권소재 대상(326개 기업, 2018년 기준)
※자회사(43), 출자회사(264), 재출자회사(19)
※ 서울특별시(156), 인천광역시(22), 경기도(148)
- 해당 소재 지역 사업개발에 의해 이전이 불가능한 기업 제외(47개)
※인천공항에너지(주), 신평택발전(주), (주)KINTEX 등

1.1 추가이전 검토 대상기관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확대

나. 이전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회사(279개)

이전대상 수도권 공공기관 투자 및 출자회사 현황

전체	형태별			지역별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79개	38 개	222 개	19 개	139 개	13 개	127 개

- ☞ 기존 혁신도시 이전기관(산업)을 감안하여 배치
- ☞ 공공기관 투자 및 출자회사의 투자 **지분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신규이전
 - 100%(자회사) : 1차 이전 대상 회사 (13개)
 - 100% 미만 30% 이상 : 2차 이전 대상 회사 (64개)
 - 30% 미만 : 3차 이전 대상 회사 (202개)

* 구체적인 회사명은 생략합니다.

23

1.1 추가이전 검토 대상기관

***특별검토

나. 이전대상 기관 및 기업(수도권내 재배치)

- ❖ 216개 (최대): 수도권 잔류 혹은 잔류 예정 공공기관 전체
 - 170개(최대): 1차 잔류 기관의 재이전 검토후 수도권잔류 결정기관
 - 46개: 2차이전 후보 508개 중 법령에 의한 잔류결정 및 잔류예정 기관
- ❖ 47개: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회사 중 서울 잔류 예상 기업
 - 전체 기업 326개
 - 해당 소재 지역 사업개발에 의해 지방이전이 불가능한 기업 47개

24

1.2 이전지원 방안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확대

가. 개별 방안

- 지방세 감면 및 혜택 확대
장기적인 운영의 안정성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Open Campus 운영 대상 확대(대학·공공기관 ⇨ 대학·공공기관·이전기업)
공공기관의 기술력 및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운영
-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활용한 이전기업 지원
지방세액 등으로 시도별 발전기금을 조성, 기금의 용도·운용은 조례로 정함
혁신도시 특별법 제49조(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시행령 제45조(기금의 설치·운영)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이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주거, 교통, 급여 지원 등) 재원으로 활용
- 이전기업 인력 및 자금 지원 전담기구 설치
원스탑 체계의 전담기구(팀) 설치

25

1.2 이전지원 방안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확대

나. 여러부처의 혁신 지원 정책 연계



26

1.3 이전 절차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확대

가. 기존도시내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

* 소요기간 2년(예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조사

지방자치단계 의견조사

- 유치희망 공공기관, 제공 인센티브등 조사

이전/잔류 기관 분류(안) 마련

이전지원방안 마련

이전(안)마련 및 의견수렴

- 지역별 배분안, 공청회, 이해당사자 설명회

이전계획 수립 및 고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심의*

* 국무회의 규정에 의해 주요정책사항 의결

혁신도시 후보지 공모 및 최종입지 선정

공공기관 이전계획서 작성 및 승인

2단계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

* 소요기간 1년(예상)

변경계획 수립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3단계 「이전기관 사옥건설」

* 소요기간 3년(예상)

설계공모 및 사옥설계

시공사 선정

착공 및 준공

27

1.3 이전 절차

1. 혁신도시 내부의 규모확대

나. 신규조성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

* 소요기간 2년(예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조사

지방자치단계 의견조사

- 유치희망 공공기관, 제공 인센티브등 조사

이전/잔류 기관 분류(안) 마련

이전지원방안 마련

이전(안)마련 및 의견수렴

- 지역별 배분안, 공청회, 이해당사자 설명회

이전계획 수립 및 고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심의*

* 국무회의 규정에 의해 주요정책사항 의결

혁신도시 후보지 공모 및 최종입지 선정

공공기관 이전계획서 작성 및 승인

2단계 「혁신도시개발사업 추진」

* 소요기간 4년(예상)

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대지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

3단계 「이전기관 사옥건설」

* 소요기간 3년(예상)

설계공모 및 사옥설계

시공사 선정

착공 및 준공

28

목 차

2 혁신도시 외부로 기반 확충

- 2.1 혁신도시 추가 조성
- 2.2 연구공간과 혁신공간의 재구성
- 2.3 기업도시의 혁신공간화
- 2.4 전국의 혁신지역을 연계

2.1 혁신도시 추가 조성

2. 혁신도시 외부로 기반 확충

혁신도시 부재 지역에 신규 조성 검토

- 추가이전 할 공공기관과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신규 조성 검토
- 비수도권의 예: 충남 내포
- 수도권의 예: 낙후지역, 신도시

기존 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 검토

- 혁신도시 부재지역의 특정 도시가 혁신도시의 성격을 가질 경우 추가지정 검토
- 혁신도시정책의 전국화를 추구하여 수도권 지역도 포함

2.2 연구공간과 혁신공간의 재구성

2. 혁신도시 외부로 기반 확충

연구공간과 혁신공간 분리의 문제점

- 대덕연구단지내 연구기관의 주요업무가 다른 혁신공간에 분포해 있는 경우, 업무 비효율 발생
 - 잦은 출장
 - 일하는 공간과 주거공간의 불일치
- 연구기관의 입지 결정 과정에서 지역특성이 배제
 - 분야에 따라 입지하지 못함
 - 특정연구가 필요한 지역에 연구 지원이 부실
-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의 기업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분원을 설치하였으나 규모나 전문성 및 관심도 미비로 지역산업을 선도하지 못함
 - 기자재를 작동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지역분원들의 비싼 장비 방치
 - 분원의 연구원들은 지역과 관련 없는 국가과제 수주에만 몰두

2.2 연구공간과 혁신공간의 재구성

2. 혁신도시 외부로 기반 확충

연구기관을 그 특성에 따라 다른 혁신공간으로 이전할 필요

- 해양/선박연구기관은 해양/선박 산업 지역으로 이전
- 항공연구기관은 항공 산업 지역으로 이전
- 에너지연구기관은 에너지 산업지역으로 이전
- 화학연구기관은 화학산업 지역으로 잇

대덕연구단지를 혁신도시로 전환하고 클러스터화를 평가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 대덕연구단지를 재평가하여 혁신도시로 전환할 종합계획 수립
- 현지의 클러스터화의 주축 역할 하고 있는 기관은 대덕에 존치
- 클러스터화에 성공하고 있는 분야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추가이전

2.3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재구성

2. 혁신도시 외부로 기반 확충

기업도시의 문제점

- 과도한 규제
- 낙후지역에 위치하여 경쟁력 부족
- 조세감면, 국고지원 부족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 기업도시에 연구개발을 지원해 줄 혁신기관이 부재

혁신도시의 문제점

- 기업의 부족
- 연구기관의 부족
- 대학의 부족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결합 방안 강구

- 기업도시에 혁신기관을 보완
- 혁신도시에 기업을 보완
- 관련 법 및 제도 개편
-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연계망 구축

33

목 차

3 새로운 혁신공간 구상: 전국의 혁신공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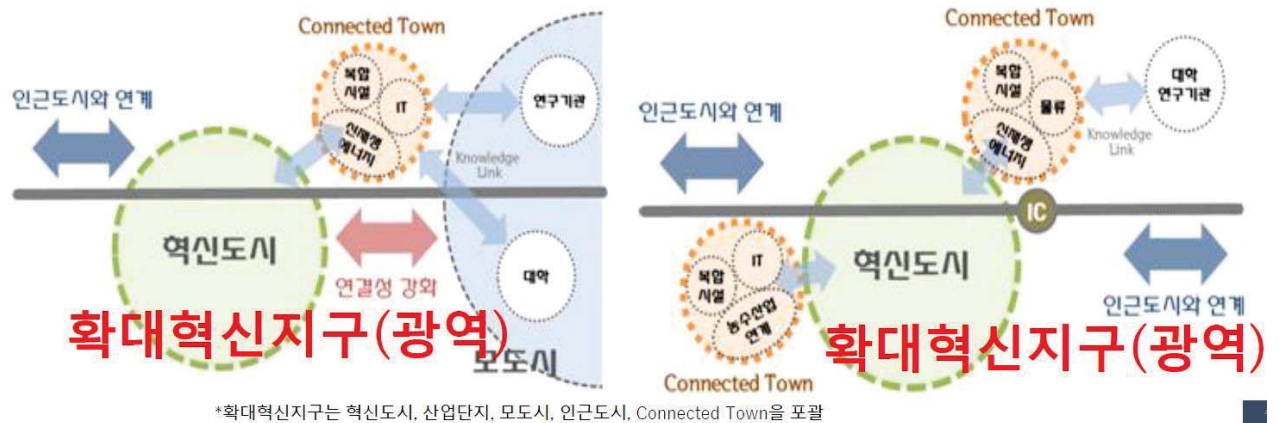
- 3.1 광역 확대혁신지구 조성: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
- 3.2 초광역 확대혁신벨트 조성: 초광역 확대혁신성장기반구축
- 3.3 전국의 확대혁신성장기반 구축

3.1 광역 확대혁신지구 조성

3. 전국의 혁신공간 연계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연계

- 혁신도시와 인근 산단과 연계
- 혁신도시와 인근 모도시와 연계
- 혁신도시와 떨어진 주변 도시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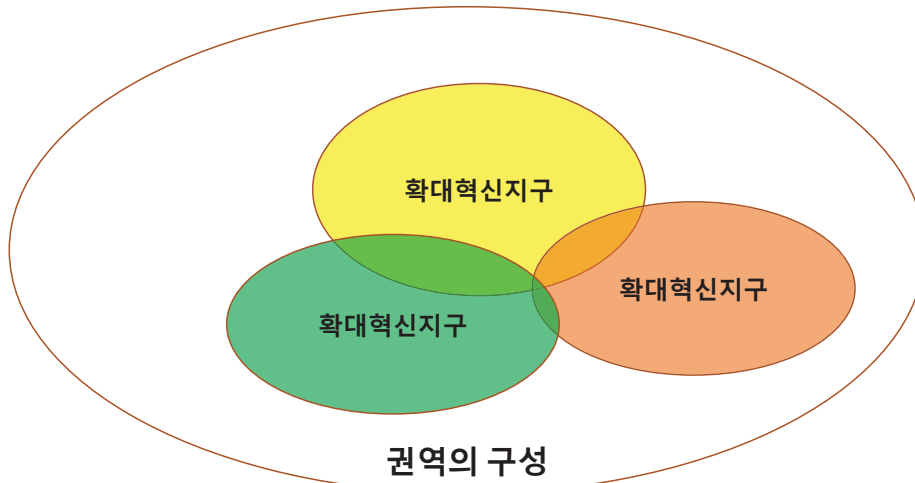


3.2 초광역 확대 혁신벨트 조성

3. 전국의 혁신공간 연계

초광역 확대 혁신성장 기반 구축

-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초광역권별 성장 거점 마련
- 확대혁신지구(광역)를 잇는 벨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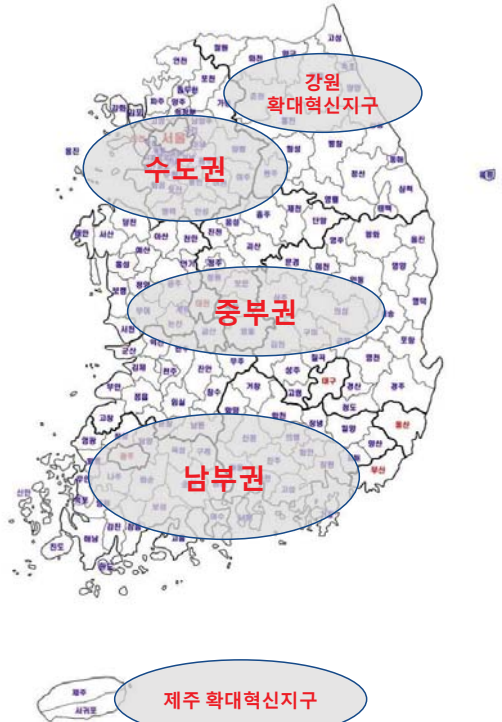
3.3 전국의 혁신성장 기반 구축

3. 전국의 혁신공간 연계

전국 확대 혁신벨트 조성

- 확대혁신벨트(초광역)를 권역별로 모아 전국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함
- 권역은 남부권, 중부권, 수도권으로 구성
- 강원과 제주는 확대혁신지구(광역)만 구축

* 유의: 제시한 권역은 논의의 편의를 위한 임의적 구분임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 현황과 과제

-강원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홍길종 교수
(강원대학교)

혁신도시 시즌2 현황과 과제

— 강원원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



2019년 8월 13일

홍길종

목차

- I. 혁신도시 정책 추진현황
- II. 혁신도시 추진 성과
- III. 강원원주혁신도시의 한계
- IV. 향후 과제

I . 혁신도시 정책 추진현황

I . 혁신도시 정책 추진현황

1

혁신도시 정책의 추진경과

시즌1 ('05.~'17.)	
2003.6. (정책구상 발표)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 발표
2004.8. (이전원칙 설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발표
2005.6. (이전공공기관 확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2005.8. (전담조직 설치)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설치
2005.12. (입지선정 완료)	•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
2007.1. (제도적 기반 마련)	•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2007.4. (혁신도시 지구지정)	•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2007.5. (개발계획 수립)	•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2008.12.완료)
2007.9. (혁신도시 착공)	• 부지조성 공사 착공
2012 (공공기관 지방이전)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개시

시즌2 ('18.~'30.)	
2017.12. (법 개정)	•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17.12.26.)
2018.2. (시즌2 발표)	• '혁신도시 시즌2' 발표
2018.3. (추진조직 개편)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3.1) •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3.27.)
2018.10. (계획 수립)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수립

I. 혁신도시 정책 추진현황

2

혁신도시 지정현황

추진 목적

-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 혁신성장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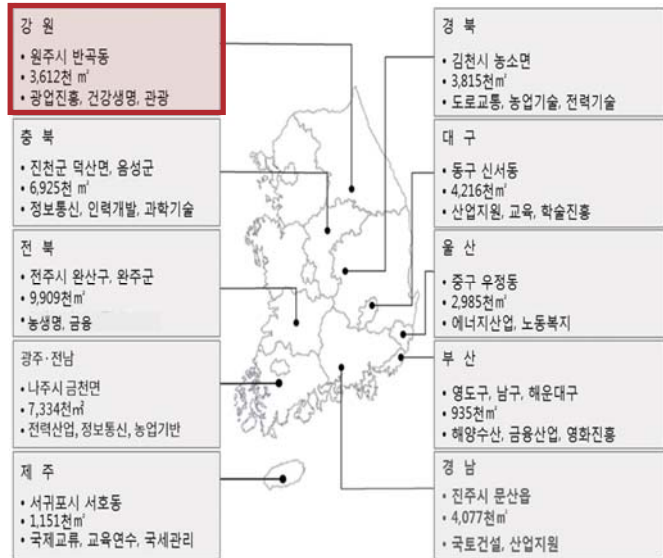
- 수도권 소재 11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10개 혁신도시 건설 추진

* 기관유형: 정부소속기관 32개, 산하기관 81개

추진 실적

- 10개 혁신도시 준공
- 이전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이전 완료(97%, 3.9만명)

10개 혁신도시 지정 현황



I. 혁신도시 정책 추진현황

3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 방향

혁신도시 시즌2 : 신지역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

-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혁신성장 거점화 정책으로 전환(2018.2)

혁신도시 시즌2의 방향

	시즌1 ('05.~'17.)	시즌2 ('18.~'30.)
추진주체	• 중앙정부 (Top Down방식)	• 지방정부 (Bottom Up방식)
정책비전	• 수도권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 육성
추진목표	• 공공기관 이전 완료	• 가족동반 이주를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
정책대상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방대학생,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
추진과제	•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 •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 수도권 종전부동산 매각	•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법적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자료: 국토교통부(2018)

I. 혁신도시 정책 추진현황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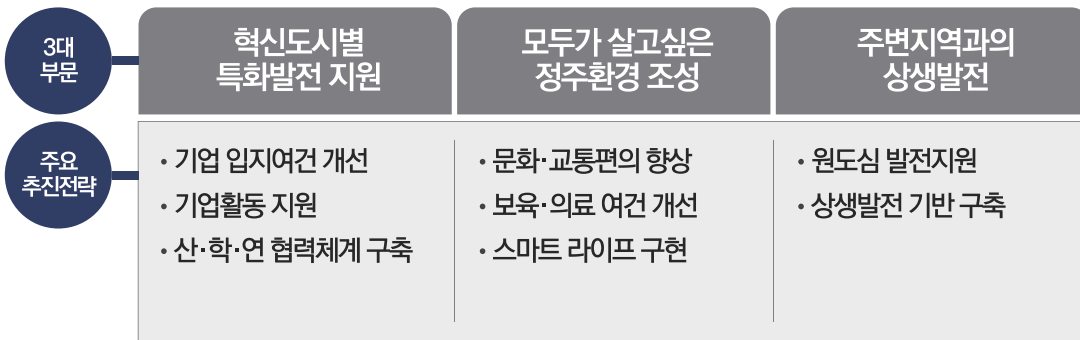
혁신도시 시즌2와 국가균형발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2018-2022)

비전

“ 혁신도시 중심으로 新지역성장 거점 구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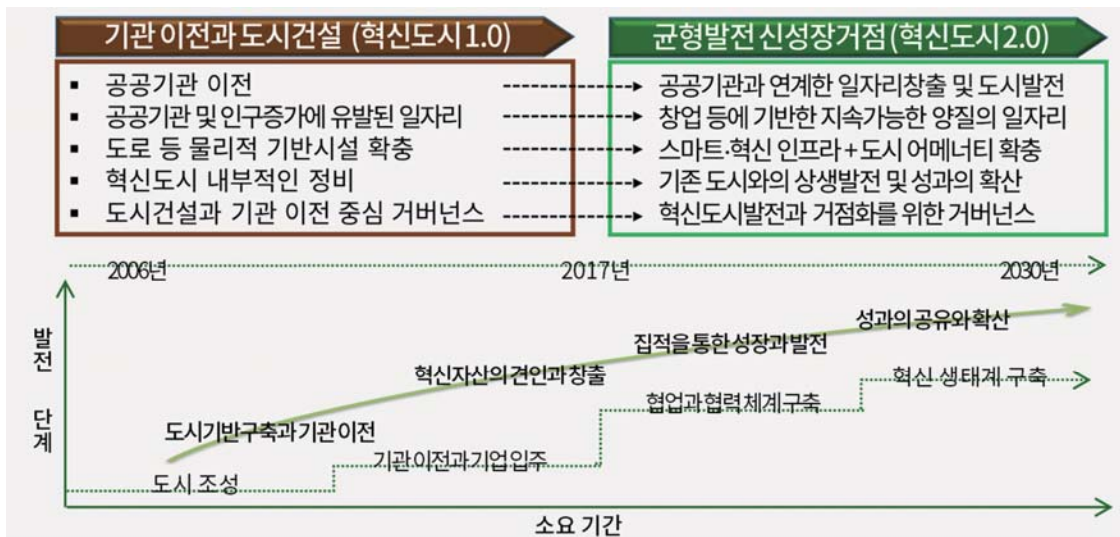
I. 혁신도시 정책 추진현황

5

혁신도시 추진 과제

기관이전과 도시건설 중심에서 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전환

● 공공기관 이전에 기초한 도시성장에서 혁신역량에 기반한 성장으로 전환



II. 혁신도시 추진 성과

II. 혁신도시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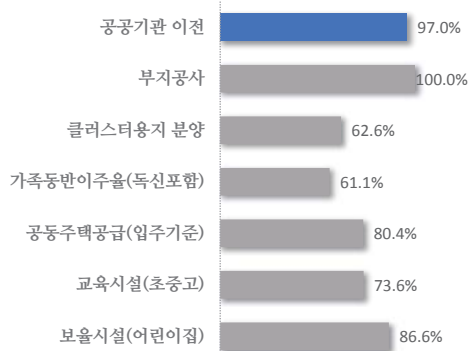
1

혁신도시 건설 성과

기관이전과 함께 정주환경 조성, 혁신 인프라 기반 구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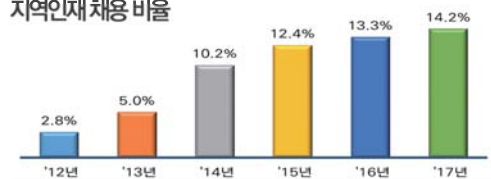
- 혁신도시 총 목표인구 27만명의 72%(19만명) 달성('18년 말)
-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 수입 증가

 혁신도시 건설 성과('18.6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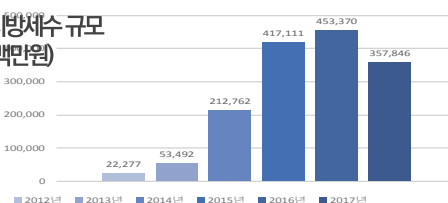


 지역인재 채용 및 지방세수 추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



지방세수 규모
(백만원)



※ 지역인재: 혁신도시 소재 시·도의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II. 혁신도시 추진 성과

2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

공공기관 이전을 개시한 이후 혁신도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며 발전하는 추세

- 10개 혁신도시 인구 2014년 5.9만 명 → 2017년 17.4만 명
- 특히 중소도시 입지 7개 혁신도시 인구가 대폭 증가(2014년 3.5만 명 → 2017년 13.1만 명)

(단위: 명)

구분	계획인구	인구		증감 (B-A)	증가율 [(B-A)/A]
		2014년(A)	2017년(B)		
대도시 입지 (3)	부산혁신도시(부산)	7,000	7,680	7,548	-1.7%
	대구혁신도시(대구)	22,000	2,111	14,483	586.1%
	울산혁신도시(울산)	20,000	14,361	21,166	47.4%
	소계	49,000	24,152	43,197	78.9%
중소도시 입지 (7)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	49,000	4,092	28,267	590.8%
	강원혁신도시(원주)	31,000	3,907	21,556	451.7%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	39,000	2,638	15,801	499.0%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	29,000	15,327	26,519	73.0%
	경북혁신도시(김천)	27,000	2,076	18,961	813.3%
	경남혁신도시(진주)	38,000	5,963	15,575	161.2%
	제주혁신도시(서귀포)	5,000	1,050	4,401	319.1%
	소계	218,000	35,053	131,080	273.9%
계	267,000	59,205	174,277	115,072	194.4%

주: 혁신도시명 옆의 괄호는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자체명.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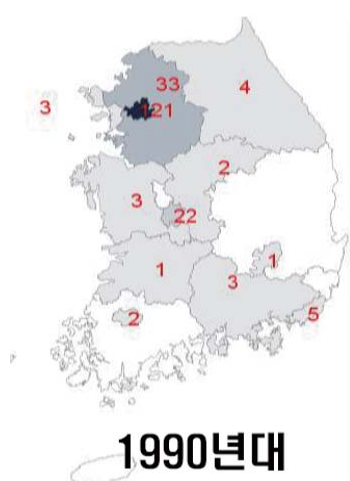
II. 원주혁신도시 추진 성과

3

신성장동력 기반확보

내생적 성장 자산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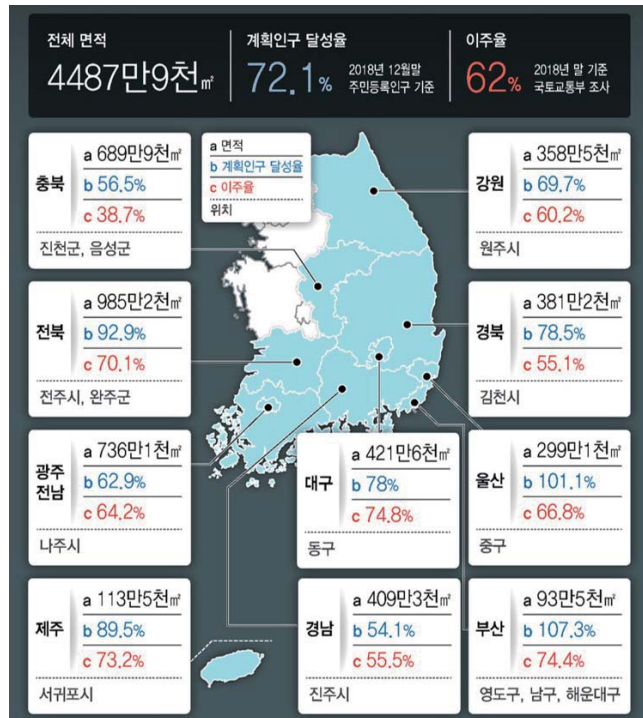
- 공공기관 자산을 활용한 지역전략 추진이 가능(공공기관 입지 매핑도, 충북연구원 2014년)



II. 혁신도시 추진 성과

3

신성장동력 기반확보



II. 원주혁신도시 추진 성과

3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



II. 원주혁신도시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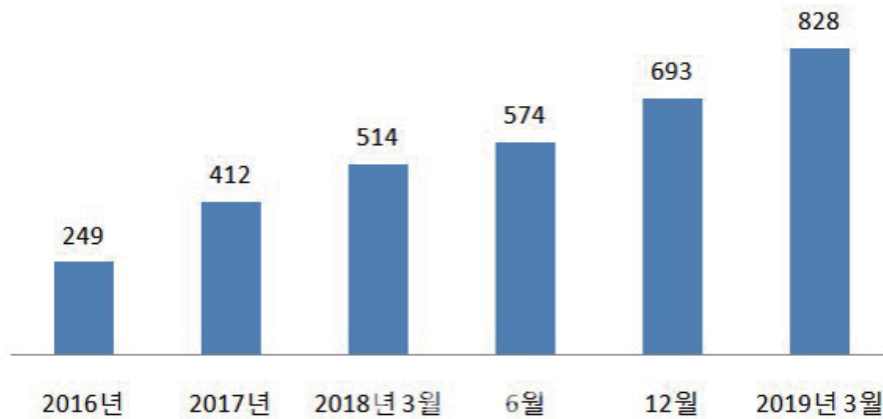
4

기업유치 효과

혁신도시 입주기업 증가

●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2016년 249개 기업에서 2019년 3월 828개 기업으로 급증

연도별 혁신도시 입주기업



III. 강원원주혁신도시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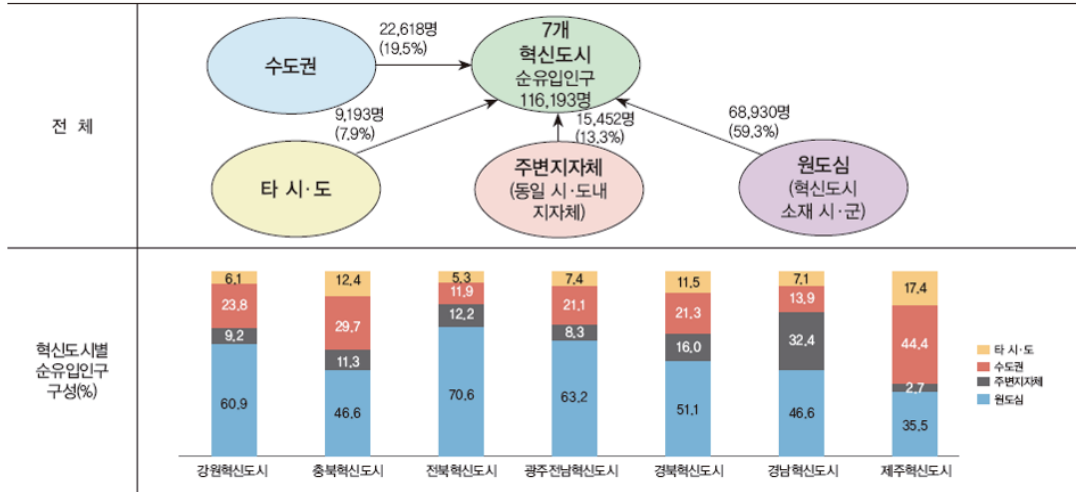
Ⅲ. 강원원주혁신도시의 한계

3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의 인구유출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로부터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 혁신도시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출된 인구는 총 8.4만 명
- 이 중 원도심에서 유출된 인구가 6.9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주변지자체 유출인구는 1.5만 명)



Ⅲ. 강원원주혁신도시의 한계

4

지역생산성 집중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 유출인구 특성

- 유소년 및 경제활동이 활발한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원도심에서 혁신도시로 4.8만 명,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1.1만 명 유출

(단위: 명)

구분	원도심 → 혁신도시				주변지자체 → 혁신도시			
	계	유소년인구	핵심생산가능인구	이외 연령대	계	유소년인구	핵심생산가능인구	이외 연령대
강원혁신도시	9,562	1,953	4,570	3,039	1,452	386	854	212
충북혁신도시	5,289	1,523	2,844	922	1,278	347	686	245
전북혁신도시	25,865	5,484	12,071	8,310	4,477	1,070	2,405	1,002
광주·전남혁신도시	13,151	3,262	6,389	3,500	1,723	418	888	417
경북혁신도시	8,136	2,132	3,848	2,156	2,549	628	1,335	586
경남혁신도시	5,562	558	2,419	2,585	3,871	1,053	1,742	1,076
제주혁신도시	1,365	300	631	434	102	30	40	32
계	68,930	15,212	32,772	20,946	15,452	3,932	7,950	3,570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Ⅲ. 강원원주혁신도시의 한계

5

가족동반 이전 미약

출퇴근 및 단신이주 위주의 이전

- 수도권 접근성, 정주여건 미비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 이전 미비하다는 평가
- but, 전체 임직원 대비 본사 임직원이 20% 수준을 고려해야 함.(부산은 6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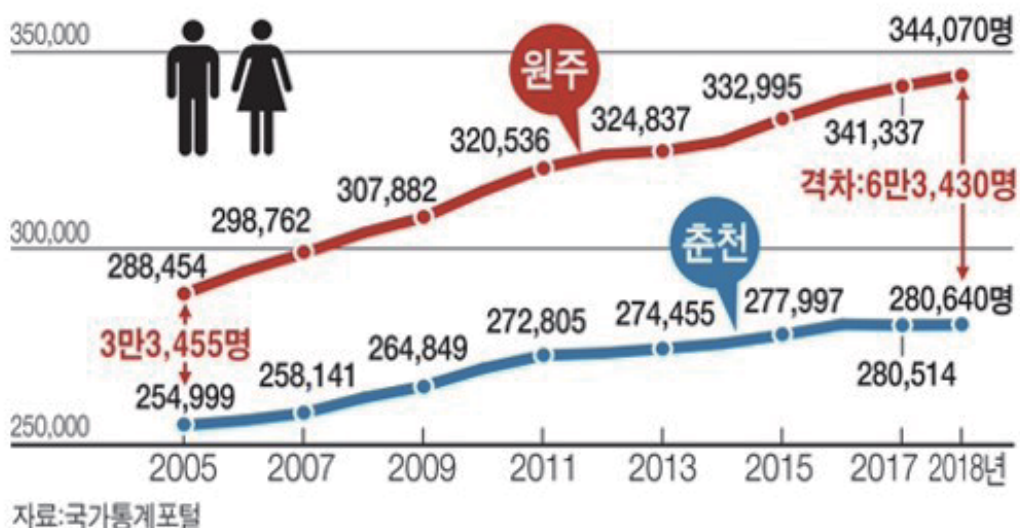
구분	가족동반	단신이주	미혼·독신	출퇴근
강원	1,446명 (29.3%)	1,640명 (33.3%)	1,523명 (30.9%)	319명 (6.5%)
	전국 9위	전국 5위	전국 1위	전국 8위
최고	전북 2,616명 (49.9%)	경남 1,822명 (44.5%)	강원 1,523명 (30.9%)	경남 0명 (0%)
최저	충북 554명 (18.8%)	충북 595명 (20.2%)	충북 586명 (19.9%)	충북 1,207명 (41%)
전체	14,715명 (37.2%)	13,052명 (33%)	9,846명 (24.9%)	1,980명 (5%)

Ⅲ. 강원원주혁신도시의 한계

6

지역 내 또 다른 자원 집중

춘천·원주 인구 증감 추이 비교 (2005~2018년)



Ⅲ. 강원원주혁신도시의 한계

7

지역인재 채용 증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존통계법	지역인재채용 의무화제도 통계법
강원	205 / 1,806 (11.4%) 전국 8위	231 / 1,936 (11.9%) 전국 8위	304 / 2,892 (10.5%) 전국 10위	145 / 497 (29.1%) 전국 2위
최고 (부산)	99 / 366 (27%)	179 / 565 (31.7%)	211 / 665.5 (31.7%)	164 / 511 (32.1%)
최저 (울산)	59 / 811 (7.3%)	53.5 / 1,193.3 (4.5%)	142.8 / 2,055 (6.9%)	(제주) 6 / 31 (19.4%)
전체	1,334 / 10,032 (13.3%)	1,463 / 10,530 (13.9%)	2,011 / 14,338 (14%)	1,423 / 6,076 (23.4%)

Ⅳ.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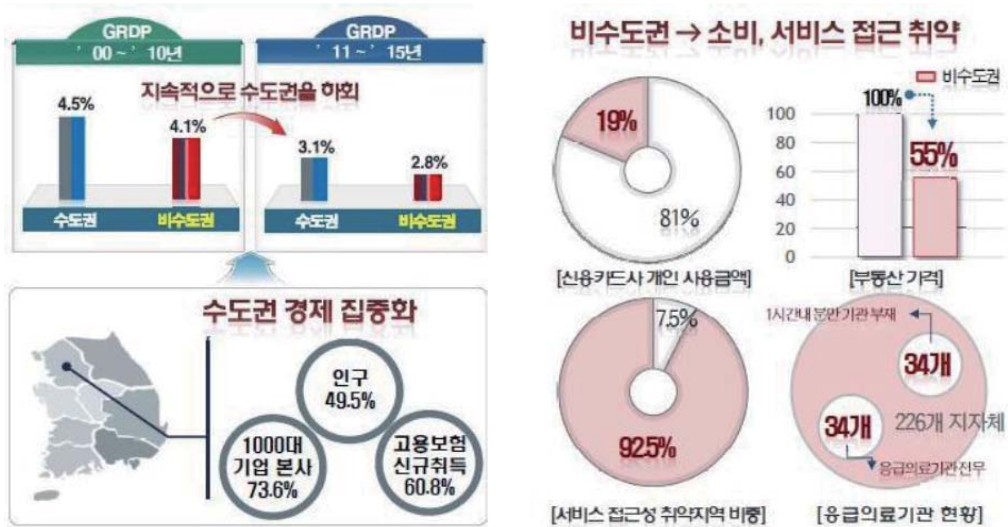
IV. 향후 과제

1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 수도권 집중은 진행중 : GRDP, 인구, 기업본사, 소비, 서비스접근성, 의료기관 집중



IV.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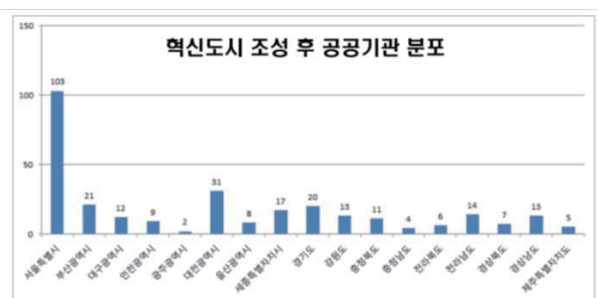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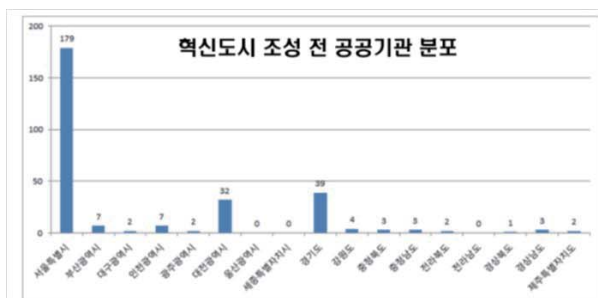
1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

혁신도시는 궁극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때 성공 →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

국가의 일관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지속

- 1973년 1차 지방이전 : 40개 개관 수도권 저개발지, 울산, 대덕 이전
- 1980년 2차 지방이전 : 제2종합청사 과천, 천안, 대전 이전
- 1990년 3차 지방이전 : 16개 청 단위 정부기관 대전, 신탄진 이전
- 2005년 ~ 현재 :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방이



IV. 향후 과제

2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상검토

공공기관 이전 기준

- 2018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현황(508개)
 - 공기업(35), 준정부기관(93), 기타(210), 공직유관단체(170)
- 법령에 의한 잔류결정 및 잔류예정 기관 제외(46개)
- 수도권 이외 지역 공공기관 및 기 지방이전 기관 제외(252개 기관)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계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210개	1개	3개	22개	86개	98개

IV. 향후 과제

3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상검토

공공기관 지방이전방법

-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지방이전
- 공공기관-지자체 협약을 통한 지방이전

협약을 통한 지방이전

- 공공기관-지자체 이전협약
 - 국토부장관에게 이전 승인 요청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이전결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
- 다만, 협약을 통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달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음.

혁신도시 활용 지방이전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조사
- 지방자치단체 의견조사
 - 유치희망 공공기관, 이전기관 제공 인센티브 등 조사
- 이전/잔류 기관 분류(안) 마련
- 이전지원방안 마련
- 이전(안)마련 및 의견수렴
 - 지역별 배분(안), 공청회 및 이해당사자 설명회 개최
- 이전계획 수립 및 고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 공공기관 이전계획서 작성 및 승인

IV. 향후 과제

4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

국가균형발전 vs 지역균형발전

- 수도권 인구 분산 → 인구 블랙홀 현상 대두, 주변 지자체 인구소멸 가속화
- 성장거점을 통한 지역성장유도 → 지역 내 또 다른 집중화
- 혁신도시와 이외 지역의 이질적 공간 출현(노동 이중구조, 공간 이중구조 등)
- 단기간 특정 구역의 개발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도시 형성 필요



IV. 향후 과제

4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 혁신도시가 지역과 상생을 이룰 때 성공 → 성장거점 기반 마련
- 성과확산과 상생발전을 위한 조직과 자원 마련이 전제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 2019년 말 출범 예정
 - 발전기금(지방세 수입을 활용) 조성 미 실시(단위 : 백 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말기준
소계	14,771	49,285	50,311	41,020	33,744	21,153
취득세	13,870	28,990	30,151	18,467	11,441	11,154
등록면허세	125	1,891	1,456	1,011	1,236	836
주민세	94	637	727	1,618	2,010	408
지방소득세	117	4,359	4,181	5,215	5,310	4,246
재산세	281	6,877	6,901	10,278	6,969	
자동차세	148	4,438	4,571	1,762	4,144	2,897
지역자원시설세					1,532	1
지방교육세	133	2,089	2,321	2,667	1,098	1,609

IV. 향후 과제

4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

사람중심 도시화 견인

- 개발중심 도시 → 사람중심 도시화 필요
- 강원원주혁신도시? 원주혁신도시? 강원혁신도시?
 - 혁신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고민

- 교환가치 중심에서 사용가치 중심으로 가치 확산
 - 더 많은 요구가 있는 주역주민 vs 예산의 한계로 애로를 겪는 공공기관
 -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혁신도시 주민 vs 소외받는다느 원도심, 주변 지자체
 - 공공청사 시설, 녹지·공원, 학교·어린이집, 스포츠시설 등의 시설의 지역주민 공동활용으로 사용가치 강화
- 사람,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문화유산, 참여, 소통, 복원 등 새로운 도시 운동 실현지로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결이 필요
 - 마을공동체 지원(마을관리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활용한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중부권 연대발전 방안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중부권 연대발전방안

2019.08.13

- I. 국가균형발전정책 변화
- II. 충남혁신도시 지정방안
- III. 국토 중부권과의 연대발전방안
- VI. 맺는 말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yjuno@cni.re.kr

I. 국가균형발전정책 변화

- 01. 지난 정부
- 02. 문재인정부

■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경위

참여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6~'2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4),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추진
- 신행정수도 위헌판결로 행정도시로 위상 저하

이명박 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11~'20)

- 초광역권 및 5+2광역경제권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사업 추진
- 국토이용효율화방안('08), 세종시 수정안('10) 논란, 국가균형발전 위상 격하, 감세로 지방재정 위기 초래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14~'18)

-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중추도시, 도농연계, 농어촌생활권) 정책 추진
- 수도권 규제(45개) 완화 본격화('14), 국정과제에 지방 실증, 지역균형발전정책 순위가 최하위권



■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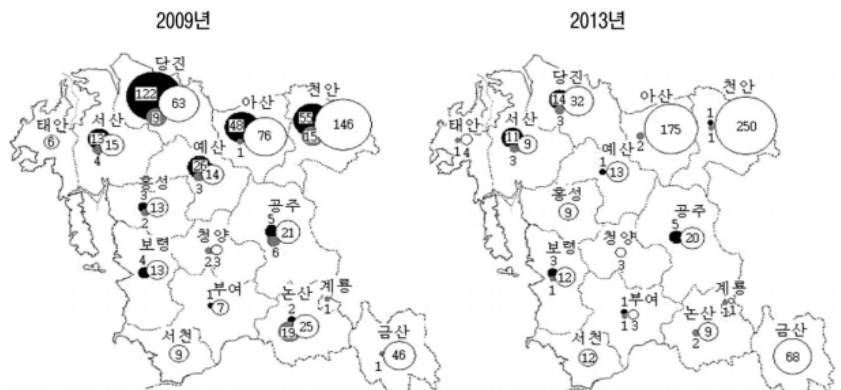
[국가적 차원] 수도권 규제 완화의 파괴적 효과 : 2008년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발표 이후

- MB정부, 박근혜정부의 균형발전 역주행 : 수도권 덩어리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풀겠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영향이 큰 충청남도는 기업유치가 1/10 토막

충청남도 수도권 기업 유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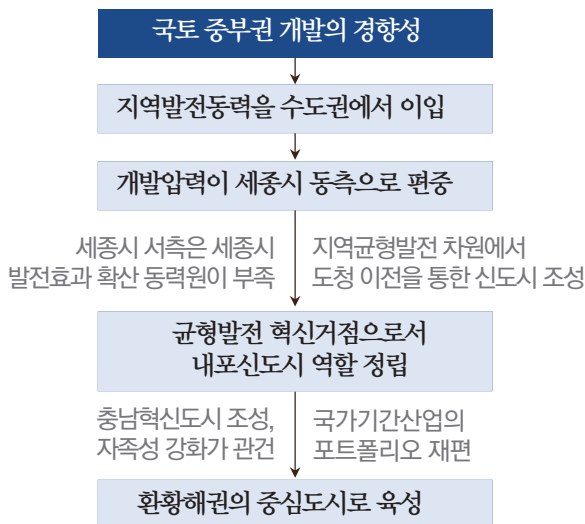
기업유치의 입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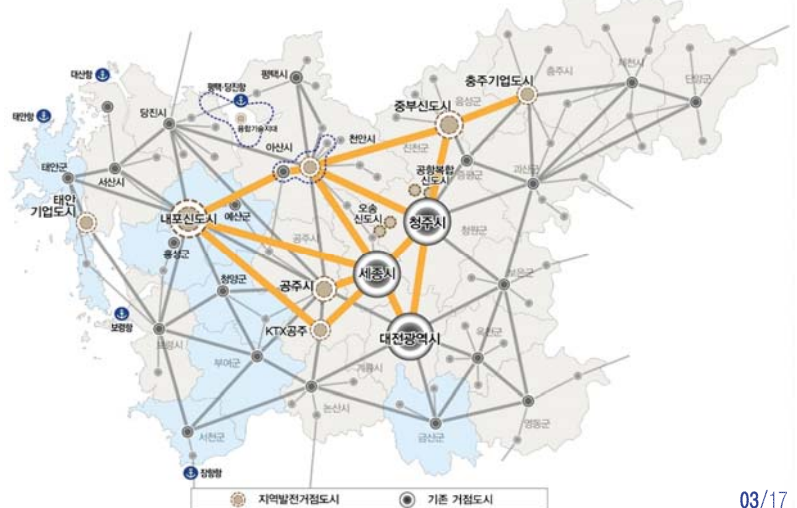
■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한계

[지역적 차원] 균형발전의 효과가 세종시 동측에 편중

- 2007년 이후 행복도시는 3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정부출연기관 이전 수용, 세종시 현재 인구는 32만명 수준
- 세종시 인구전입규모(2012~2018)는 대전(116,262명) > 수도권(92,811명) > 충청권 외(42,646명) > 충남(41,069명) > 충북(38,384명) 순



충청·세종권의 공간구조



0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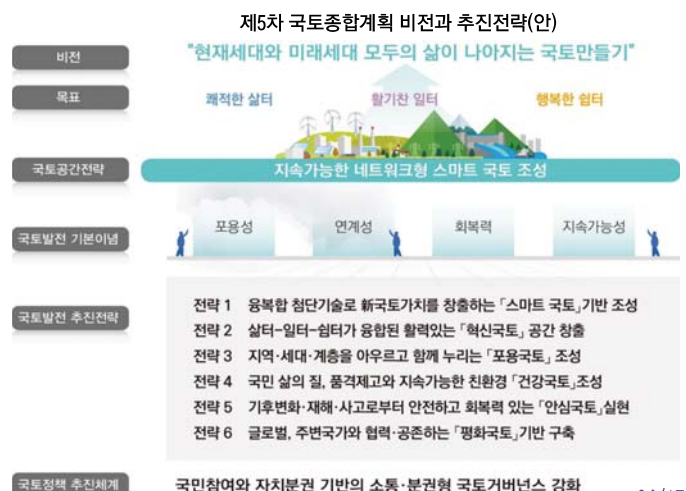
■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

비전 :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 중앙~지방 간 계획계약제도 시행, 이전 공공기관의 산업자원화, 광역클러스터(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네트워크형 스마트 도시 조성) 등 추진
- 지역 감소도시권 육성 및 농촌지역 신활력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지표 개발, 찾아가는 헬프 서비스 확대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③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방방곡곡 생기는 공간	④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⑤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⑥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혁신	⑦ 혁신도시 시즌 2 ⑧ 지역산업 3대 혁신 ⑨ 지역 유류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자료 : 국토연구원, 2018.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방향

04/17

■ 문재인정부의 충청남도 지역공약

충남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 천안·아산 KTX 역세권을 R&D 집적지구로 조성추진) 확대
-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 백제왕도 유적 복원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원
-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 장항선 복선 전철화 및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추진
- 서산~천안~청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문재인정부의 국정목표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쏠림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05/17

Ⅱ. 충남혁신도시 지정방안

01. 내포신도시 현황
02. 충남혁신도시 지정 당위성
03.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문제인식

혁신도시 지정지역 중 수도권이 아닌 도단위에서 충청남도만 배제, 국가균형발전 위한 지역안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

헌법적 명령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국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님

01 | 충남혁신도시 지정방안 내포신도시 현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내포신도시 조성

도청이전 의미 : 공주시대 → 대전시대 → 내포(內浦)시대로 전환

- 조선 후기 관찰사가 큰 고을의 수령직을 겸하면서 충청도 감영이 청주에서 충청도 중앙인 공주(금강유역 수로교통 중심)로 이전
- 1932년 조선총독부는 경성 중심의 X자형 철도망 가까이 대전에 충남도청을 이전해 착취 편의를 기하는 식민지 개발정책 추진
- 2012년 80년 간 대전시대 마감, 충남도청을 홍성·예산으로 이전 → 서북부지역 개발효과를 남쪽 낙후지역으로 확산하는 핵심거점

내포신도시 개발 : 2020년까지 계획인구 10만명이 거주 가능한 신도시 조성

- 홍성군 · 예산군 일원 995만㎡(약 300만평)에 2007~2020년까지 2조 5,692억원 투자, 계획인구 10만명의 내포신도시 건설
- 유치대상기관 128개 중 2017년말 현재 93개 도단위 기관 및 단체 이전, 2018년 9월 현재 인구 인구는 24,132명 수준



구분	기간	개발목표 및 방향	계획인구(인)	개발면적(㎡)
1~2단계 (조성 및 발전단계)	2007~2015년	· 도청 및 유관기관 이전 - 행정타운(도청 및 유관기관) 집중 개발 - 교육, 문화등 공공편의시설 및 도시기반 시설 공급	50,000	7,777,000 (78.2%)
3단계 (정착단계)	2016~2020년	· 도청 및 유관기관 조기 정착 유도 · 대학 및 산업단지 유치 -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 중심으로 개발	50,000	2,173,000 (21.8%)
합 계			100,000	9,950,521

02 | 충남혁신도시 지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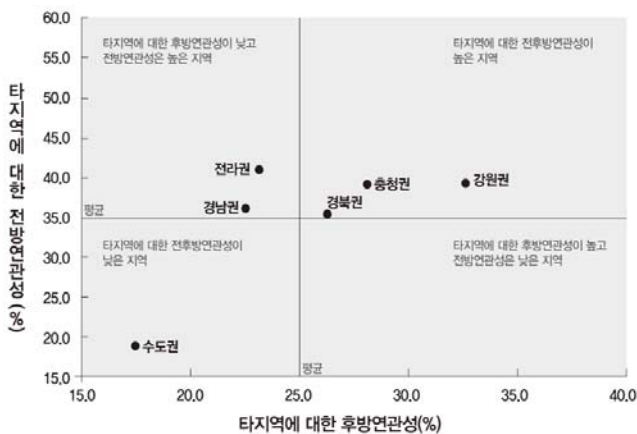
충남혁신도시 지정 당위성

①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문재인정부의 지역공약 실현수단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육성

- 충청남도는 전형적인 교역형 지역으로써 지역 내·외로 이입되거나 이출되는 비율이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를 보유
 - 대외적으로 내포신도시를 대외적으로 중국과 근접한 환황해권의 진입거점이자 교통요충지로서 서해안축을 따라 접근 용이한 지역
 - 대내적으로 내포신도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면서 수도권의 압출여력을 흡수하여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혁신거점

전·후방연계성으로 구분한 지역경제구조



환황해권 중심도시의 미래



0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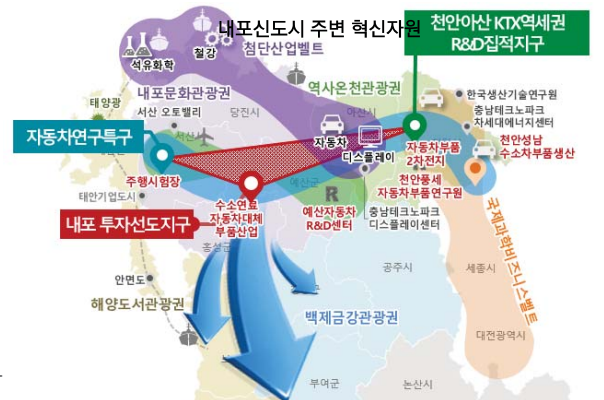
02 | 충남혁신도시 지정방안

충남혁신도시 지정 당위성

②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국가기간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생존전략

서해안 국가기간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개편

-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자동차 5.1%, 철강 디스플레이 42.3%)이 전세계 수출 중 우리나라 수출비중 2.8%를 훨씬 상회
 -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서해안 기간산업을 재편
- 내포신도시를 허브(hub)로 자동차부품R&D센터(예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실용화 산업 기반육성(안)(홍성, 예산),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안)(홍성), 무인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서산바이오웰빙특구), 완성차 기능(아산, 서산), 석유화학산업단지의 부생수소(서산), 자동차용 강판(당진) 등 지원기능(spoke)과 연계
-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국가주력산업의 체질 개선
 - 서해안 기간산업지대가 한국판 러스트벨트(Rust belt)가 되지 않도록 주력산업 혁신 위한 산업구조 개편,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육성



내포신도시를 미래기간산업의 헤드쿼터 및 서해안 벨리의 혁신거점으로 조성

08/17

02 | 충남혁신도시 지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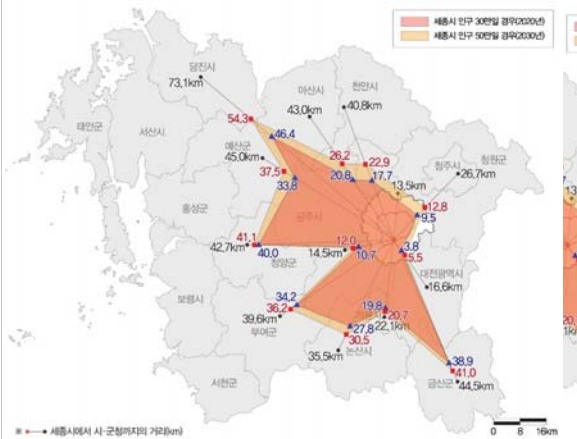
충남혁신도시 지정 당위성

③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국토 동서축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

국토발전축을 경부축에서 동서축으로 전환하기 위해 세종시 역류효과 억제하며 내포신도시 육성

- 인구순수(2012~2017년)는 13.7만명, 경제적 순수(2012~2017년)는 GRDP, 재정수입 등 25.2조원(연평균 4.2조원)
→ 2021년 기준 세종시와 공주시간 통행량 점유율(10.0%)이 청주시(3.0%)의 3배 넘게 예측됨에도 세종시 광역교통망은 동축 중심 확충
- 내포신도시는 국토발전 축을 경부축 중심에서 동서축으로 전환하는 혁신거점 역할 담당, 행정도시 조성 목적(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와 함께 일극종형(一極從型) 국토공간구조를 다극형(多極型) 구조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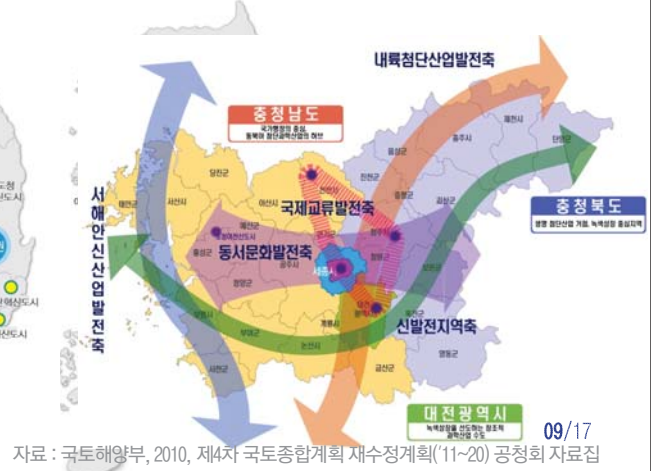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 영향권 분석



다극형 국토공간구조



2020년 충청권 발전 공간구상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11~20) 공청회 자료집

09/17

02 | 충남혁신도시 지정방안

충남혁신도시 지정 당위성

③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국토 동서축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

국토발전축을 경부축에서 동서축으로 전환하기 위해 세종시 역류효과 억제하며 내포신도시 육성

- 2007년부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사업(지특 200억, 도비 300억, 시군비 500억) 추진
- 2007년부터 동서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에 위치한 충남도청과 유관기관을 홍성·예산군으로 이전하며 내포신도시를 건설 중(2조6천억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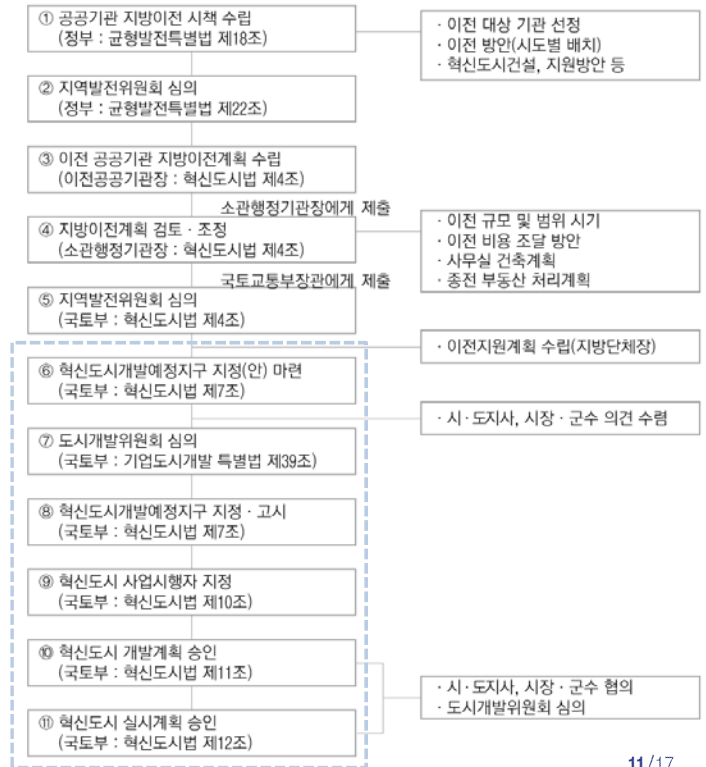
10/17

■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기존 도시 내 혁신도시 지정절차 마련

- 혁신도시를 신도시 개발방식이 아니라 이미 기반시설이 조성돼 공공기관 이전의 저비용·고효율을 꾀할 수 있는 경우 단기간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
- 기존 도시 내 혁신도시 지정절차 마련
 - ① 1단계 :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자치단체 의견조사 → 이전기관 분류 → 공청회 → 이전계획 고시)
 - ② 2단계 :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변경계획 수립 → 관련부처 협의 및 공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 ③ 3단계 : 이전기관 사옥 건설(설계공모 및 설계 → 시공사 선정 → 착공 및 준공)
- 동시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수도권 설립을 불허하도록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혁신도시 지정 및 개발절차



Ⅲ. 국토 중부권과의 연대발전방안

01. 충청·세종권 발전 시나리오
02. 분권형 균형발전모델 일련지
02. 청년일자리 만들기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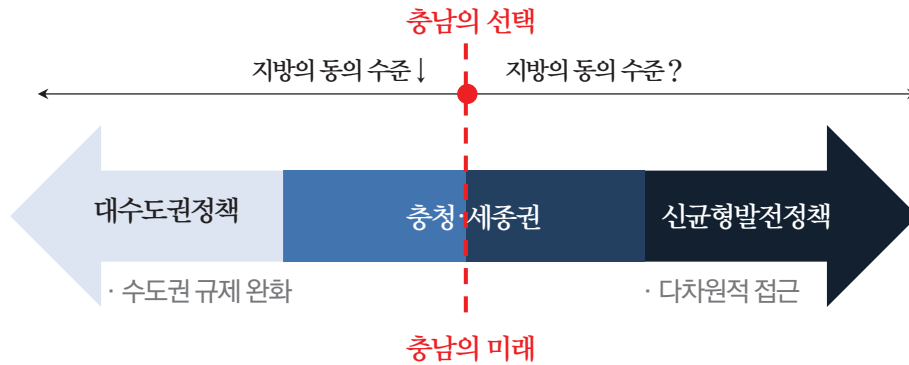
01 | 국토 중부권과의 연대발전방안 충청·세종권 발전 시나리오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중부권 연대발전방안

■ 국토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

다수의 국토전문가

“수도권이 초광역화되면서 충청·세종권 전체를 물리적으로 포섭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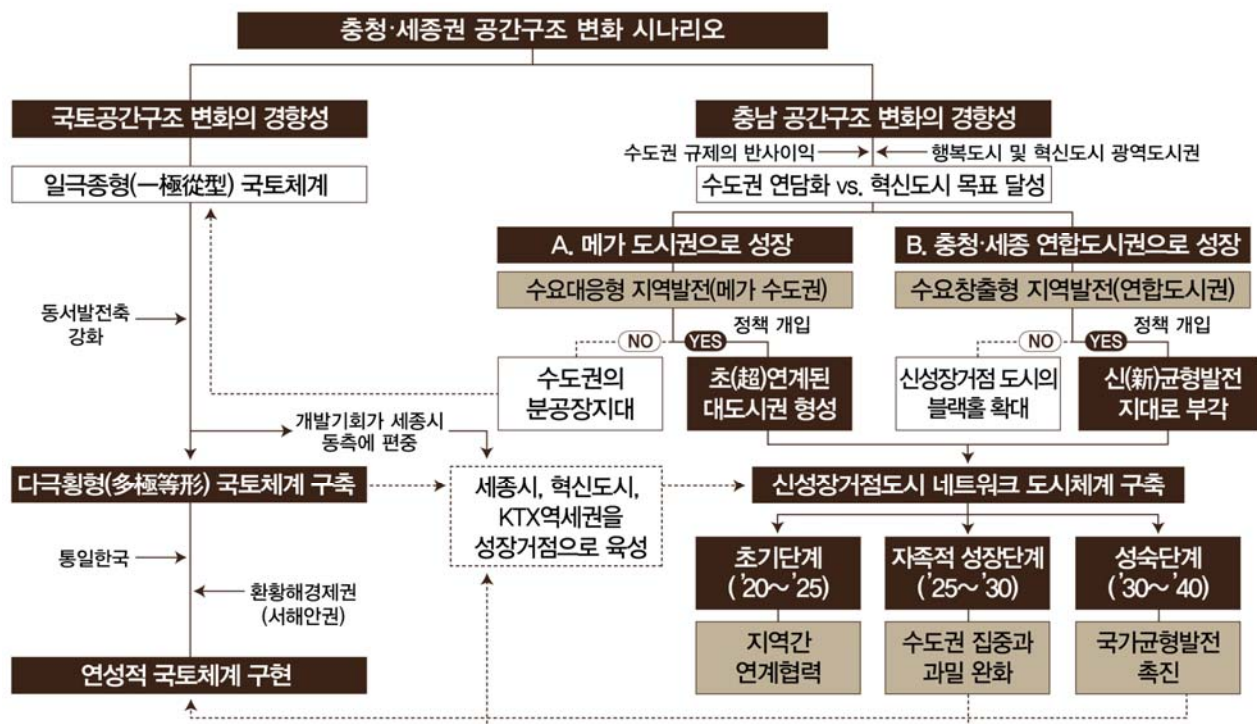
국토개발 경향성을 토대로 미래 공간구조 변화의 시나리오를 구상

12/17

01 | 국토 중부권과의 연대발전방안 충청·세종권 발전 시나리오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중부권 연대발전방안

■ 충청·세종권 발전 시나리오 : “수도권 연담화 시나리오” vs. “충청·세종 연합도시권 시나리오”



1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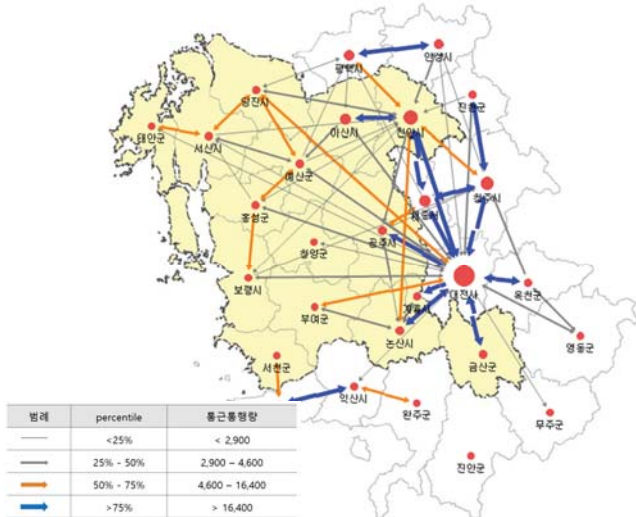
01 | 국토 중부권과의 연대발전방안 충청·세종권 발전 시나리오

■ 충청·세종 연합도시권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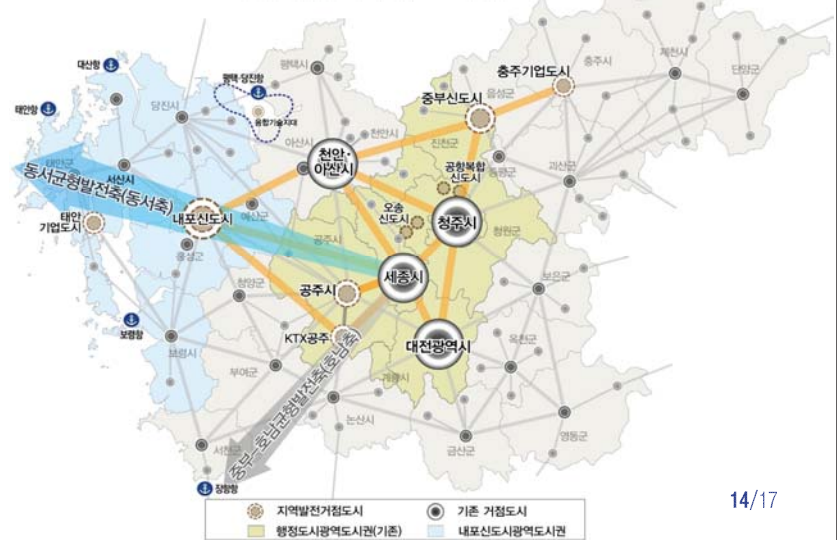
국토 중부권 신성장거점도시 간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 네트워크 도시체계는 전문화된 중심지들 사이의 수평적·비계층적 관계로 구성 → 기존 도시와 혁신도시, 세종시, 기업도시 사이에 전문화보완관계·공간분업·협력·혁신에 입각해 국토 동서축 기능 강화, 호남지역과 연결하는 국토상생발전모델로 국가적 대의명분 모색

충청·세종권 내 지역 간 평균 통근·통행 패턴



충청·세종권의 네트워크 도시체계



14/17

02 | 국토 중부권과의 연대발전방안 분권형 균형발전모델 일번지

■ 국가적 관점 : 분권형 균형발전 일번지

신(新)균형발전 = 새로운 균형발전 = 분권형 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 2.0(중앙+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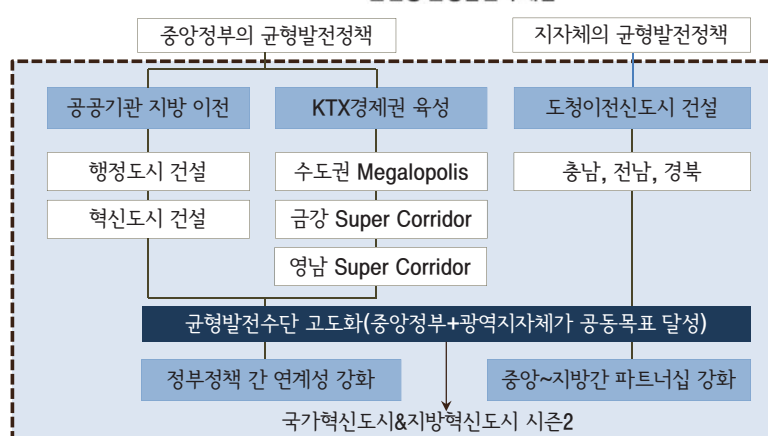
-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광역지자체의 균형발전정책을 결합,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 국가혁신도시와 지방혁신도시가 중심이 된 다극형(多極型) 공간구조를 형성하여 국토 중부권에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전제로 영국의 도시권 협상(City Deals)*처럼 새로운 경제권역(New BESETO, 베이징~세종~도쿄)으로서 위상, 책무,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을 설정하고 구체화

* 중앙정부가 도시연합체인 LEF(지방정부와 기업 간 협의체)와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지방정부의 경제성장방안을 지원하는 제도

다극형(多極型) 국토공간구조



분권형 균형발전의 개념



15/17

■ 지역적 관점 : 충청·세종권 단위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지역인재 의무채용범위 광역화 + 旣 이전기관 소급 적용을 일괄 적용

-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전의 旣 이전 기관을 소급적용하면서 동시에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를 추진
→ 지역학생들은 직장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이전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
- 旣 이전기관을 소급 적용한 상태에서 대전·충청권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효과를 추정하면, 전체 43개 공공기관에 권역 내 62개 대학 졸업생이 최소 180명 이상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지역 旣 이전기관 채용의무화 도입시 채용인원은 10개 기관에 의무화 대상인원이 696명(39.8%)에 달하고, 이 중 2018년 지역인재 채용 예상인원은 129명 수준임(채용목표비율 18.0% 적용시)

충청·세종권 광역화 효과 추정(2017년 기준자료 활용)

구분	공공기관 (개)	대학교 (개)	졸업생수 (명)	지역인재의무화			
				전체 채용 인원(명)	대상인원* (명)	채용인원** (명)	비율 (%)
대전	10	17	26,739	1,751	696	129	18.0
충남	3	27	36,464	346	276	40	14.5
충북	11	19	23,357	289	118	11	9.3
세종	19	4	4,380	193	0	0	0.0
계	43	67	86,560	2,579	1,090	180	16.5

주 1 : 대상인원은 2017년 전체채용규모 중 의무화 대상비율(39.8%) 적용

2 : 채용인원은 의무화 대상인원에 2018년 채용목표비율(18.0%) 적용

Ⅲ. 맺는 말

01 | 맺는 말

국가적 명분 종합

■ 문재인정부의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속에서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지정명분

- ① 문재인정부의 지역공약(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육성)을 실현하는 핵심수단
- ② 분권형 균형발전모델(중앙의 국가균형발전정책(행정도시, 혁신도시)+지방의 지역균형발전정책(도청이전신도시))로 추진
- ③ 서해안 국가기간산업의 포트폴리오 개편의 중요계기 마련, 충남혁신도시를 서해안 벨리의 혁신거점으로 조성
→ 내포신도시에 적합한 후보 공공기관은 7개 기능군 총 16개 기관 검토
- ④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국토발전 축을 정부축 중심에서 동서축으로 변경하는 동서균형발전혁신거점 육성
→ 세종시 주변 동서지역 간 불균형 해소, 세종시 법적지위 결정에 따른 부정적 효과 극복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국토 중부권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조건

17/17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의 과제와 발전방향

-혁신도시 시즌II와 연계하여-

송부용 선임연구위원
(경남연구원)

혁신도시의 과제와 발전방향

- 혁신도시 시즌 II와 연계하여 -

2019. 08. 13

박진호, 송부용

 **경남연구원**
Gyeongnam Institute

차 례

I. 혁신도시 개요



II. 혁신도시와 해당 지역과의 관계



III. 혁신도시 시즌 II 추진계획 및 경쟁력 강화방안



IV. 결론 및 제언



I. 혁신도시 개요



1. 추진 개요

2. 혁신도시 이전 현황

3. 발전과제

1. 추진 개요

□ 배경 및 목적

- 수도권 과밀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3대 핵심과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중 2003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 발표,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법의 근거 마련
-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후 2005년 12월,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 (6개월)

<그림>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

지역 성장 거점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특성 있는 지역발전

- 특성화된 지역개발
(지역별 테마형 도시개발)
-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국가균형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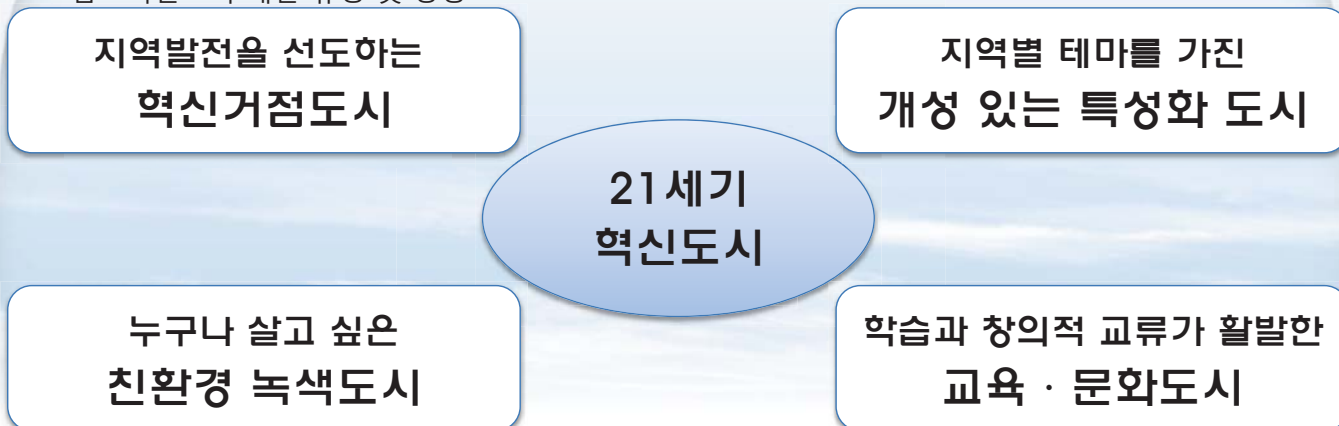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연계
- 산학연관 클러스터 형성

자료)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2008); 재구성

□ 혁신도시의 성격 및 개발 유형

-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방의 자립화 구축을 도모
- 지역의 핵심 거점 역할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상호 교류
- 양질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주거·교육·문화 등 생활여건을 구비
- 전국적인 공공행정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국토의 통합적 발전을 유도

<그림> 혁신도시 개발 유형 및 방향



자료) 건설교통부(2005); 재구성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 입지선정 기준

- 당시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2005)'을 기준으로 선정
- 각 사·도의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입지선정 및 후보지 선정 절차 이행

<표>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구분	항목	배점	내용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20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	20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용이성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용이성
	기존 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 가능성	10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활용가능성 편익시설 활용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	15	산업단지, 택지 등 기개발지의 활용가능성 관련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여부 등 토지확보의 용이성 도로, 용수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지가의 적정성 및 부동산투지 방지대책
	환경친화적 입지 가능성	10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 개발가능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가능성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	지역내 균형발전	10	지역내 균형발전 가능성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	10	기초자치단체의 혁신도시 개발이익과 성과공유계획
	자지단체의 지원	5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계획
총계		100	

자료) 건설교통부(2005); 재구성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2. 혁신도시 이전 현황

□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이며, 이중 345개가 수도권 소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중 175개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
농촌진흥청 및 관세국경관리연구원 등 5개 기관 추가로 최종 대상은 180개 기관
-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 및 부설 기관 독립에 따른 신규 지정으로 153개로 조정
- 혁신도시 115개 + 개별 이전 19개 + 세종시 19개
- 수도권과 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 차등 배치

<표>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지역	계	소속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전체	153(27)	44	18	51(5)	40(22)
혁신도시	113(10)	32	15	44(2)	22(8)

주) 임차기관 수입
자료) 건설교통부(2005); 재구성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2. 혁신도시 이전현황

□ 배치 현황

-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이며, 이중 345개가 수도권 소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중 175개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
농촌진흥청 및 관세국경관리연구원 등 5개 기관 추가로 최종 대상은 180개 기관

<표>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지역	기능군	이전 기관
부산 (13)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대구 (11)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한국감정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광주/전남(16)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등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력공사 등
울산 (9)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강원 (12)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충북 (11)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북 (12)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경북 (12)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
경남 (11)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주) 등
제주 (6)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자료) 혁신도시 홈페이지(2019년 8월 기준); 재구성

□ 혁신도시 등 이전공공기관 현황

- 올해까지 3개(광주전남, 울산, 충북) 혁신도시에 각 1개씩의 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완료

<표> 이전 공공기관 현황

지역	계	소속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전체	153(27)	44	18	50(5)	41(22)
혁신도시 계	113(10)	32	15	43(2)	23(8)
부산	13(4)	2	2	4(1)	5(3)
대구	11	2	2	6	1
광주/전남	16	3	3	9	1
울산	9	2	2	4	1
강원	9	1	2	7	2
충북	12	3	-	4	4
전북	11	7	-	3	2(1)
경북	12(1)	6	2	1	3(2)
경남	12(2)	1	2	4(1)	4(2)
제주	6	5	-	1	-
기타 계	40(17)	12	3	7(3)	18(14)
세종시	19(14)	-	-	3(2)	16(12)
개별 이전 (21)					
오송	5	3	-	2	-
아산	4	4	-	-	-
기타	12(3)	5	3	2(1)	2(2)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2018.12); 재구성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3. 발전과제

□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이전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낮음 (2017년 기준 14.2% 수준)
- 계약학과 운영 등 지역대학과 연계한 적극적인 인력 양성 필요

□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여

- 이전기관의 특성과 연계, 지역 전략산업군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경남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클러스터 용지 활용 예정

□ 가족 동반 이주비율 향상

- 혁신도시에 소재한 기관의 종사자들 중 지역에 터전을 마련한 비율이 낮게 나타남
- 혁신도시 내부가 아니더라도 이전을 장려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혁신기관의 연계성 강화

- 혁신기관(대학, 연구소, 기술이전기관 등)과의 전략적 연결성 강화가 필요
- 원천기술 개발(대학)-기술이전 지원(공공기관)-기술 창업(연구소기업 등)의 생태계 구축

□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확대

-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의 쇠퇴 현상 가중 등 기존 도시의 인구 흡인 요인으로 작용
- 상생발전을 위한 다각적 정책사업(교통, 도시, 경제, 문화 등) 발굴이 필요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II. 혁신도시와 해당 지역과의 관계

1. 혁신도시 일반 현황

2. 특화산업과의 관계

3. 인력양성과의 관계

4. 유관기관과의 관계

1. 혁신도시 일반 현황

□ 입주기업 현황

- 시즌2 발표 이후 혁신도시의 공간 중 클러스터용지의 내외부 입주기업은 증가 추세
- 경남(218), 광주·전남(205), 부산(139), 대구(130) 등의 순

<표> 입주기업 현황

(단위 : 개사)

지역	합계 (A+B)	혁신도시내		2019년입주 (1/4분기)
		클러스터내(A)	클러스터외(B)	
합계	828	602	226	135
부산	139	0	139	22
대구	130	130	0	20
광주·전남	205	150	55	32
울산	31	30	1	△3
강원	44	43	1	4
충북	33	19	14	9
전북	2	2	0	0
경북	26	11	15	3
경남	218	217	1	48
제주	0	0	0	0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혁신도시 시즌2 훈풍, 2019.04.22.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1. 혁신도시 일반현황

□ 분야별 입주기업 현황

- 분야별로는 기타 제조(235), 지식산업(208), 의약기기 제약(123), 영상 게임(115) 등의 순
- 경남은 기타 제조(104)와 지식산업(100)에 집중

<표> 분야별 입주기업 현황

(단위 : 개사)

지역	합계	금융 보험	영상 게임	대학 연구소	병원	의료기기 제약	전기분야	지식산업	기타 제조
합계	828	25	115	27	1	123	94	208	235
부산	139	24	114	0	0	0	0	0	1
대구	130	0	0	12	0	116	0	0	2
광주·전남	205	0	0	1	0	0	80	52	72
울산	31	0	0	4	0	0	0	0	27
강원	44	0	1	0	0	4	1	26	12
충북	33	1	0	8	0	0	3	13	8
전북	2	0	0	0	0	0	0	0	2
경북	26	0	0	0	0	2	0	17	7
경남	218	0	0	2	1	1	10	100	104
제주	0	0	0	0	0	0	0	0	0

주) 2019년 3월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혁신도시 시즌2 훈풍, 2019.04.22.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 가족동반 이주비율

- 반면, 전체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48.0%로 과반을 넘지 못함
- 부산(63.8%), 경남(63.7%), 전북(60.9%), 울산(55.6%) 순으로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음

<표> 가족동반 이주율

(단위 : 개사)

지역	이전인원 (A)	가족동반 (B)	단신이주	독신 미혼 (C)	출퇴근	가족동반 이주율 (B/(A-C))
합계	38,384	13,791	12,847	9,678	2,068	48.0
부산	2,947	1,407	800	740	-	63.8
대구	3,393	1,283	1,189	904	17	51.5
광주·전남	7,187	2,802	2,583	1,776	26	51.8
울산	3,096	1,301	1,014	754	27	55.6
강원	4,954	1,312	1,775	1,458	409	37.5
충북	2,743	484	512	534	1,213	21.9
전북	4,972	2,436	1,514	975	47	60.9
경북	4,509	1,197	1,490	1,496	326	39.7
경남	3,831	1,208	1,767	856	-	40.6
제주	752	361	203	185	3	63.7

주) 2018년 6월말 기준

자료) 강원도민일보, 원주혁신도시 유입 61% '지역주민', 2018.12.05.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 지역인재 채용 현황

- 지역인재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14.2%임 (전반적인 지역인재 채용 향상이 요구됨)
- 부산(31.3%), 대구(24.9%), 광주·전남(16.2%) 등 대도시에 속한 혁신도시에서 비중이 높음

<표> 지역인재 채용 현황

(단위 : 명)

지역	대상 기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전체	지역	비율(%)	전체	지역	비율(%)	전체	지역	비율(%)
합계	109	8,934	1,109	12.4	10,032	1,334	13.3	10,301	1,463	14.2
부산	11	361	85	23.5	366	99	27.0	563	176	31.3
대구	9	430	78	18.1	527	112	21.3	420	105	24.9
광주·전남	13	2,077	296	14.2	2,316	264	11.4	2,444	397	16.2
울산	7	297	30	10.1	797	58	7.3	1,193	54	4.5
강원	11	1,434	157	10.9	1,806	205	11.4	1,936	231	11.9
충북	10	261	25	9.6	318	27	8.5	293	24	8.2
전북	6	481	73	15.5	765	10	13.1	755	109	14.4
경북	8	1,970	192	9.7	1,449	252	17.4	990	185	18.7
경남	10	735	80	10.9	881	99	11.2	1,088	126	11.5
제주	3	39	4	10.3	53	8	15.1	78	5	6.4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2018.06), 혁신도시 종합발전 워크숍, 자료집; 재구성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 인구 추이

- 혁신도시 조성이 추진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인구 추이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
-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지만, 서귀포시, 전주시, 나주시 등의 지역에는 증가함

<표> 주민등록인구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부산 영도구	184,488	162,961	146,798	129,385	126,362	123,521	120,109
부산 남구	299,518	302,257	298,458	283,101	278,779	273,854	279,917
부산 해운대구	408,842	404,599	426,729	422,818	419,853	412,039	409,347
대구	2,524,253	2,511,306	2,511,676	2,487,829	2,484,557	2,475,231	2,461,769
울산 중구	232,038	235,417	232,915	244,481	242,536	238,652	231,973
원주시	270,009	288,454	314,678	332,995	337,979	341,337	344,070
진천군	60,121	60,155	62,094	67,981	69,950	73,677	78,218
음성군	87,956	85,969	91,093	96,396	97,787	97,306	95,830
전주시	620,521	621,749	641,525	652,282	651,744	648,964	651,091
완주군	84,009	83,651	85,119	95,303	95,480	95,975	94,444
나주시	108,459	97,980	90,118	98,182	104,376	110,110	113,839
김천시	149,864	141,632	136,136	140,132	142,256	142,908	141,104
진주시	341,822	336,234	335,037	344,426	346,739	346,681	345,987
서귀포시	85,571	83,027	153,716	164,519	170,932	178,383	181,245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 특화산업과의 관계

□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 한계

-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지역의 특화산업이 한정적인 분야임
- 새로운 공간에 조성되는 특성 상,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산업지원 등의 기관과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 (경남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참여기관 포함)

<그림> 지역 전략산업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관련성 (경남 사례)



3. 인력양성과의 관계

□ 지역대학의 전공 분야와의 관계

- 산업지원 및 기타 기관에서 요구되는 관련 전공 분야가 운영 중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등)
- 최근 관련 기관의 신규 채용은 기간제, 인턴 등이 대부분이며, 정규직 비율은 극히 적음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시기 등을 고려한 전략적 인력 양성이 요구되는 시점임

<그림> 지역 전략산업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관련성 (경남)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3. 인력양성과의 관계

□ 오픈 캠퍼스 운영 확대

- 지역대학, 지자체 등이 지역특성 및 이전 공공기관 수요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제공
-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
- 한국전력 에너지신산업 Open Campus, 한국감정원 인턴십 과정 등 운영 ('18년 12개)

<그림> 오픈캠퍼스 운영 개념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2018.10.)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

III. 혁신도시 시즌 II와 추가 공공기관 이전방안



1.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계획

2. 추가 공공기관 이전·유치방안

3. 지원 차원의 준비사항

1.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계획

□ 비전 및 목표

비전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화				
	살기 좋은 도시 조성		혁신 성장 지역 거점화		
목표 (2022)	■ 가족동반 이주율 58% → 75% ■ 삶의 질 만족도 52점 → 70점		■ 지역인재 채용률 13% → 30% ■ 입주기업 수 232개 → 1,000개		
3대 전략	■ 2018년까지 추진기반 정비 및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확충 ■ 2020년까지 공공기관 정착 및 도시 안정화 ■ 2022년까지 혁신도시 중심의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추진 과제	이전기관 지역발전선도	스마트 도시 조성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02),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재구성

□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과제명	이행 계획	이행 시기	주관 부처
[1]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① 지역인재 채용 확대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연도별 실적 대외발표	2018.02~ 2018.12	국토부
②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사업 추진	기관별 지역발전 계획 수립 이전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화, 서비스 지역우선 구매 관련 기업·연구소 유치사업	2018.08. 2018.06~ 2018.04~ 2018.02~	국토부
③ 이전기관 지자체 협업을 통한 기업, 대학교 유치 촉진	클러스터 부지내 대학이전 규제완화	2018.12.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④ 이전 공공기관 오픈 캠퍼스	오픈캠퍼스 과정 운영	2018.07.	국토부
[2]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① 혁신도시 테마에 맞는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 조성 도시운영 통합플랫폼 구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	2018.02~ 2018.09. 2018.02~	국토부
②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도시 정주인프라 투자 확대	종합병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여가, 문화시설 국비지원 확대		교육부 보건부 문화부 국토부
③ 혁신도시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불편 해소	고속, 시외버스 노선 확대 구도심과 연계교통 개선	2018.02~	국토부
④ 이전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 지원	맞벌이부부 삼각교류 활성화 지역융합 프로그램 지원 등	2018.02~	교육부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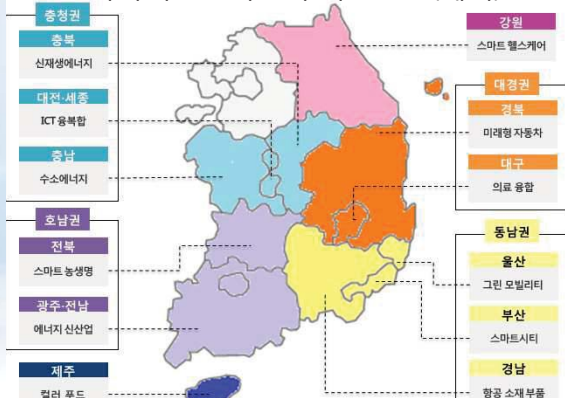
과제명	이행 계획	이행 시기	주관 부처
[3]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시도별 클러스터 계획 수립	2018.06. 2018.09.	산업부
② 지역 내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산학융합지구 확대 R&D, 비R&D과제 지원	2018.02~	산업부 중기부
③ 투자유치 인센티브 연계를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입주규제 최소구역 연계 투자선도지구 지정 촉진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기능 연계	2018.12. 2018.08. 2018.02~	국토부
④ 혁신성장 인큐베이터 역할 강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개소 SW 품질역량센터, 3D프린팅센터 연계	2018.12.	국토부 과기부
[4]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①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 클러스터 육성 맞춤형 강좌, 전공 개설 지역인재 대상 장학금 확대 현장실습 및 교수요원 활용	2018.12.	교육부
② 혁신도시와 구도심 재생 연계	김천, 나주 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우선선정 고려 문화진흥 네트워크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시 인센티브 상생발전기금 조성 유도	2018.02~ 2018.02~ 2018.12. 2018.12. 2018.12.	국토부 문화부 농림부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과제명	이행 계획	이행 시기	주관 부처
[5] 추진체계 재정비			
①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 종합발전계획 수립	2018.03. 2018.10.	국토부
② 혁신도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재단 설립	2018.03. 2018.12.	
③ 혁신도시 특별회계 기능 강화	세출항목 다양화 등	2018.12.	기재부 국토부

<그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방향(예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02),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그림> 연계 클러스터 운영모형



□ 시즌1과 시즌2 정책 비교

- 공공기관 이전 단계를 넘어 직원 정착, 주변지역(도시, 대학, 주민)과의 상생발전 도모

<표> 혁신도시 시즌1(1단계)과 시즌2 정책 비교

구분	혁신도시 1단계	혁신도시 2단계
추진정책	공공기관 이전 (1단계)	지역거점 육성 (2단계~3단계)
사업추진주체	국토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자체, 지역발전위원회, 이전기관	국토부(혁신도시발전지원단), 지자체(발전추진단, 발전위원회 구성), 지역발전위원회, 이전기관
공공기관 연계사업	10개 혁신도시 중 3개 혁신도시가 협력사업 추진 (대구, 전남, 충북)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한 자족기능을 갖춘 클러스터 조성
클러스터 활성화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컨트롤타워 역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4차 산업혁명 선도 컨트롤타워 정비)
인센티브 지원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없음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혜택 추진
정주여건 개선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할 교육복지, 생활환경 여건 미흡	교육부, 복지부, 문화부 등이 공동과제 발굴 집중 수도권 인구유입 촉진, 기관 종사자 정착 지원
스마트 시티 육성	기능 없음	지능형 스마트도시로 육성
구도심 연계사업	연계 없음	도시재생과 기존 시가지 활성화사업 추진

자료) 윤정란 외(2018), 혁신도시 시즌2 실행력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보고서.

2. 추가 공공기관 이전, 유치방안

□ 추진경과

- 2005.06.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발표
- 2018.07.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중 150개 이전 완료(98%)
 - 경남혁신도시 : LH 등 11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
- 2017.11.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이해찬 의원 주요발언)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단계적 지방이전 시책수립 촉구
- 2018.09.04. 이해찬 민주당대표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
 - 이전대상 공공기관 최대 122개 지방이전시책 수립 촉구
 - 서울 99개 48,066명, 인천 3개 4,246명, 경기 20개 5,896명

□ 이전 제외 가능성이 높은 기관

- 기 이전 기관 6개 : 기술보증기금(부산), 한국해양수산연구원(부산), 항로표지기술협회(창원), 해양과학기술원(부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진주), 대한적십자사(원주) 등

2. 추가 공공기관 유치방안

□ 이전대상 공공기관 산업별 분류

- 과학기술 분야에 33개 기관이 포함되어 가장 많으며, 문화체육(22), 보건복지(15) 등 다양
- 금융보험 분야는 노무현 정부의 심의 결과, 잔류 기관이 4개 포함 (중소기업은행 등)

<표> 이전대상 공공기관 산업별 분류

산업별	기관수	주요 기관명
과학기술	33	코레일네트웍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문화체육	22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문화재단, 대한체육회,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보건복지	15	대한적십자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금융보험	12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림해양	10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환 경	5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교 육	6	한국폴리텍,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기 타	19	우체국시설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이전대상 공공기관 부처별 분류

- 부처별로 기타 기관이 26개 가장 많고, 문화부(18), 과기부(13), 복지부(12), 산업부(11) 순
- 주무 부처별 특색을 찾기 어려우며, 유치를 위한 타겟 선정 및 논리 개발이 필요

<표> 이전대상 공공기관 부처별 분류

기관명	기관수	기관명	기관수	기관명	기관수
문화부	18	해수부	6	환경부	4
과기부	13	교육부	4	고용부	3
복지부	12	국무조정실	4	금융위	3
산업부	11	여성부	4	기재부	3
국토부	7	특허청	4	기타	26

□ 기존 혁신도시 연계 기관 유치 (경남 예시)

-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관은 21개이며, 다양한 규모의 기관이 분포
- 저작권위원회 관련 기관이 대부분 소규모로 집적화의 당위성 확보가 가능

<표> 기존 혁신도시 연계 기관 유치

이전 공공기관	기관수	기관명(정원)
저작권위원회	6	한국특허전략원(125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82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81명), 한국저작권보호원(79명), 한국영상자료원(70명),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33명)
중소기업진흥공단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043명), 중소기업유통센터(155명), 한국발명진흥회(153명), 한국벤처투자(72명), 중소기업은행(12,520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366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313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36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22명)
국방기술품질원	3	한국국방연구원(435명), 전략물자관리원(47명), 국방전직교육원(27명)
남동발전	3	한국지역난방공사(1,776명), 한국석유관리원(347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36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458명)

□ 지역 주력산업 연계 기관 유치 (경남 예시)

- 경남 주력산업 분야인 조선해양과 나노, 세라믹, 바이오 등의 과학기술 분야의 유치 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관련성이 높은 기관과의 연계 협력 유도가 필요
- 다만, 해양 관련 기관이 부산에 집적된 것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낮을 수 있음

<표> 주력산업 연계 기관 유치

산업 분야	기관 수	기관 명(정원)
조선해양	3	해양환경관리공단(591명), 한국어촌어항협회(124명), 해양조사협회(46명)
과학기술 (나노, 세라믹, 바이오 등)	7	한국과학기술연구원(830명), 한국과학창의재단(101명), 한국나노기술원(74명), 농림식품기획평가원(70명), 식품안전정보원(59명), 한국안전기술원(56명),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40명)

3. 지역 차원의 준비사항

□ 유치 당위성 마련 및 타겟 기관 설정

- 공공기관의 특성상, 특정지역에 집중적인 기여를 목적으로 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렇지만, 지역의 전략산업이나 기존 공공기관과의 연계성 등 논리적 당위성 마련이 시급

□ 부지 확보

- 1차 검토는 기존 혁신도시의 유휴 부지 또는 배후지역 등 고려
- 2차 신규 대상지 발굴 및 기능적 연계 가능성 검토 (과학기술 및 혁신기관 집적지 등)

□ 유치 전담조직 운영

-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운영
- 도 차원의 기관으로 당위성 마련과 현장실사 등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공공기관 지원방안 마련

- 청사 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연관산업 유치를 위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기관의 부지 매입대금 이자 및 임차료 지급

□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방안 마련

-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제공 (국민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조건)
- 85㎡이하 면제, 85~102㎡ 75% 감면, 102~135㎡ 62.5% 감면
- 공동주택의 50%~70% 범위내 특별 공급 (또는 미분양 아파트의 공공주택 공급 등 고려)
- 종사자 및 고등학교 자녀에게 이주 정착금 및 장학금 지원

I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제언

1. 요약 및 결론

□ 당정 협의 등 정치적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 여권을 중심으로 당정간 협의를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 구체적인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연말 결과 발표 예정
- 행정기관과 정치권이 공조하여, 유치를 위한 노력 필요
- 총선을 앞둔 시점에 지역 정서에 민감하게 작용될 우려로 발표 연기도 가능

□ 전략산업과 유관(기술핵심)기관의 연계 및 당위성 확보

-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춘 혁신기관과의 공조체계 마련 등 당위성 확보 필요
 - 충남 :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바이오식품 등
 - 충북 : 태양광 클러스터, 스마트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등
- 정책 주체의 변화(정부 주도 → 지역 혁신)에 맞춰 지역내 혁신 생태계 등의 제안

2. 제언

□ 나눠먹기식 배분의 지양

-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슈와 글로벌 공조체제의 위기 등 다양한 이슈가 내포되어 있음
- 앞으로 100년의 국토 공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
- 특히, 지역 전략산업 육성, 혁신기관과의 생태계, 지역 인재 연계 등을 고려한 판단
- 추가 이전에 따른 지역의 발전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 객관적 선정기준 확립

- 중앙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여 지표의 설정과 평가 과정의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검토
-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함

□ 매력적인 혁신도시를 위한 정책 개발

- 새로운 기회로 일정한 공간의 혁신도시만이 아닌 도시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획 필요
- 풍선 효과로 인해 기존 도심이 쇠퇴하는 현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감사합니다 !

경남연구원 *Since 1992*

공
공
공

국가균형발전 체계 변화의 필요성

모성은(한국지역경제연구원)

□ 국가균형발전의 과정과 연혁

- 1980년대 수도권정비계획과 균형발전
 - 시대적인 인식과 정책적 사고
- 2000년대 국가균형발전
 - 지도자의 리더십과 전문가집단의 형성
- 문제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2.0

□ 국가균형발전의 성과

- 수도권정비계획의 성과와 찬반 논리
 -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 절대적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찬반 논리
 - 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과 인식

□ 정책 변화의 방향설정

- 수도권적인 시각과 지방적인 시각
- 권역적 · 광역적 시각 그리고 지역적 시각
- 물리적 시각과 비물리적 시각의 차이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토론문

박성훈(조선대학교)

- 혁신도시를 건설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지역간 균형발전임.
-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건설로 다음과 같은 성과가 필요함.
 - 1. 혁신도시 건설 성과
 - 2.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
 - 3. 신성장동력 기반 확보
 - 4.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
 - 5. 기업유치

○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혁신도시는 앞에 언급한 성과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산학협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나주혁신도시의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는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은 지역인재의 고용증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기업은 인재를 발굴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이전을 꺼리게 됨.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전에 따른 인구증가보다는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의 인구유출로 혁신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

둘째, 혁신도시 건설을 공공기관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직 도시 정주환경 구비가 미흡한 상황임. 나주혁신도시의 경우에도 아직 문화, 여가시설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파악됨. 정주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족을 동반한 이주를 유인하기 어려울 것임.

□ 혁신도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언

- 중앙정부는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 산학협력을 위해 대학은 지역인재를 발굴해야 하며, 기업과 협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학과 설치.
- 혁신도시 발전기금의 활용.
- 정주여건을 우선적으로 개선.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토론회

안기돈(충남대학교)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지역의 유능한 인재 유입이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지역선도대학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선도대학 사업은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이 제기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역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선도대학의 취지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공공기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과과정, 커리큘럼, 강의방법, 강사 등 강좌 전반적인 내용을 대학이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기획하고 운영하라는 것이다.

지역산업정책을 주로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본 사업은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칭찬해주고 싶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유능한 지역인재의 지역기업 취업이다.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미스매치로 인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제안한 것이 “기업을 대학 안으로, 교육에서 채용까지”란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커리큘럼을 해당 산업의 기업들과 기획하여 강의내용을 기업이 원하는 내용으로 하며 강사 역시 기업의 대표 또는 연구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강의에 대한 아이디어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제안한 것을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이다.

충남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2015년에 BT분야를 대상으로 한 학기를 실시하였던 경험에 의해 본 강의 방식의 효과에 대해 확신한다.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을 핵심 전략은 “기업을 대학 안으로, 교육에서 채용까지” 처럼 공공기관을 교육에 직접 참여시켜야한다.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토론문

엄수원(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대전·세종·충남지역에는 혁신도시 지정 및 조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음.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권에 구멍이 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 대응하여 균형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중부권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국토 균형발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국면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혁신도시 시존2에서는 국토균형발전 구현이라는 혁신도시정책의 근본적인 정책목표에 비추어 이러한 문제점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중부권의 신흥 거점권역 육성이라는 논리개발이 절실함.

이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하는 신 혁신도시 지정 육성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를 공간적으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간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대전·세종 광역 혁신도시권 육성”, 나아가 대전·세종·내포 신도시지역을 잇는 초광역 혁신도시권의 조성을 통한 중부권 신흥 혁신거점권역 육성이라는 단계적 공간 전략이 필요함

1. 전략 I: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혁신도시로 확대 육성

대전시의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혁신도시 기능을 추가 지정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덕연구단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과학기술 연구단지로서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15%, 국내 이공계 박사급 연구 인력의 11%가 밀집되어 있으며 국내 최고의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곳임. 혁신도시의 가치사슬이 연구개발 기능과 혁신주체(대학, 연구소, 기업 등), 생산기능, 판로 등으로 구성된다면, 대덕 연구개발 특구는 이러한 구성인자를 이미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음.

대덕연구단지(27.8km²)에는 ETRI 등 정부출연(연)과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으며, KAIST 등 연구중심 대학과 벤처 협동화단지 등으로 구성된 R&D 집적지가 구축되어 있음. 인근 대덕테크노벨리(4.3km²)에는 대덕연구단지의 첨단업종이 입주하여 연구생산 배후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대덕산업단지(3.2km²)는 대덕특구 연구성과의 시제품개발, 제품생산 등 전문 생산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제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첨단융복합의 연구개발 역량, 일류대학의 우수한 인재, 첨단 기업의 성장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사업화의 허브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있는 만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혁신도시 기능을 확대 접목하여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장지역이자 중부권의 신흥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12년 간 변화 추이 (2005.12~2017.12) >

- 특구 내 기업체 수 : 687개 → 1,784개로 약 2.6배 증가
- 매출액 : 2,564십억 → 16,035십억으로 약 6.3배 증가
- 고용현황 : 23,558명 → 72,671명으로 약 3.1배 증가
- 총 연구개발비 : 1,813십억 → 7,990십억으로 약 4.4배 증가
- 특허등록(국내+해외) : 28,560건 → 89,817건으로 약 3.1배 증가
- 코스닥 등록기업 수 : 11개 → 41개로 약 3.7배 증가
- 매출액 : 2,564십억 → 16,035십억으로 약 6.3배 증가
- 연구소 기업 : 2개 → 277개로 약 138.5배 증가
- 첨단기술기업 : 36개 → 117개로 약 3.3배 증가

2. 전략 II: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세종시를 연계한 “광역 혁신도시권” 육성

주변지역 간 경쟁에서 상생의 구도로 인식 전환이 요구됨.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대전시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인구가 유출되어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 이해갈등 문제가 불거짐, 이러한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에 기초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공간적 범위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 대전·세종권역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중부권의 신흥거점권역으로 육성한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이는 보다 큰 성장잠재력을 지닌 기반이 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생정책을 추진한다면 상호관계는 성장 배후도시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상생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3. 전략 III: 대전·세종·내포신도시로 이어지는 “초광역 혁신도시권” 육성

이러한 논리를 좀 더 확대한다면 대전·세종·내포 신도시로도 확대가 가능해짐. 내포 신도시 역시 충남도청이 이전하여 충남 행정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국토공간상에 균형있게 지정되어 육성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만 없는 실정임. 대전·세종·충남권역 내 소재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서 배제되고 있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해 대학을 타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지역인재가 유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지역의 위축 및 침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내포신도시는 차제에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충남지역 혁신성장의 교두보가 되어야 하며, 대전·세종권역의 혁신 클러스터와 함께 광역화된 신흥 성장거점권역으로 육성되어 명실상부한 수도권에 대응하는 중부권의 성장권역이 되어야 함. 이는 국토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며, 신규 신도시 조성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조성되어 있는 기반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높은 대안이라 할 수 있음. 또한 남북축으로만 성장축이 인식되는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동서축의 성장권역을 육성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4. 제도적 지원 사항

현재의 혁신도시는 신도시조성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해당구역만을 혁신도시로 지정 운용되고 있음. 이 경우 공간적 폐쇄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혁신주체인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이전입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의 가치사슬을 창조하는데 한계가 있고, 공간규모 상으로도 지방의 신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현재의 혁신도시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권역으로 공간적 확대를 꾀함으로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및 대학, 산업시설 등도 혁신도시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존 도시 내 신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즉, 혁신도시 부재지역의 특정 도시가 혁신도시의 성격을 가질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클러스터화에 성공하고 있는 분야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이전하는 전략이 요구됨. 나아가 현재의 혁신도시를 광역적 성격의 혁신도시권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됨.

이를 통해 현재 혁신도시 지정지역 중 수도권이 아닌 도 단위에서 충청남도만 배제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안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전시에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 특혜를 받지 못하는 불균형 문제점도 극복할 수 있게 됨.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토론회

우 경(김포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학과)

○ 세 발표자분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며 동의함. 다만 발표 내용 중 일부 미시적인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함. 토론 요지는 세분 발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함

○ 첫 번째 이민원 대표님의 혁신도시 성과달성을 위한 추가이전 검토추진과 이전지원방안에 동의하며 지속적인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또한 혁신도시 이전 기업들에 대한 지방세감면과 혜택,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활용한 이전기업 지원은 제도적 마련과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본 내용은 두 번째 발표하여 주신 홍길중 교수님 발표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인데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이전으로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세의 현신도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을 대폭 증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혁신도시 지역 관련 취득세, 등록세 교부금을 100%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교부지원하는 방안)

○ 각 부처의 혁신지원정책의 연계 방안에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종합발전의 장기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40)을 수립 중에 있음.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혁신 지원정책이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일관되게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함(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흔들린 적 있음)

○ 추가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추가이전방안으로 기존 혁신도시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추가조성, 기업도시를 혁신도시로 활용하는 방안, 대덕연구단지의 혁신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의 경우 100만평 이하의 경우 5년 동안, 이상의 경우 1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없고, 추가조성의 경우 보통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음 홍길중 교수님 강원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발표한 내용대로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아직 미비하고 구도심의 인구유출 등의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확산을 조직과 재원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지방세 수입을 활용한 발전기금의 조성과 지원, 현식도시 지원센터를 축으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며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 할 필요가 있음

○ 세 번째 오용준 선임연구위원님 발표내용에 대해 발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함. 당초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할 수립할 때에 충청남도 내에 혁신도시 건설을 배제 한 것은 충청남도에서 세종시 위치를 고려 할 때 다소 미흡 한 점이 있었다고 봄

○ 현재 혁신도시 시증2와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기존 혁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혁신도시 추가개발, 대덕연구단지 역할과 기능 재정립, 기업도시의 혁신도시로 활용 등이 검토 될 수 있으나,

○ 충남 내포신도시의 면적규모, 충청남도에서의 위치 및 국토종합계획상 환황해권벨트 중심, 주변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국가혁신 클러스터 등 고려 할 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에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봄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토론문

이근재(부산대학교 경제학부)

○ 문제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 2019년 1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발표
- 국가균형발전 계획에서 분권, 혁신, 포용의 균형발전 지원체계 구축하여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그리고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의 비전과 목표 제시
- 재정분권 추진계획안: 지방소비세 재원 확대 등의 지방세수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지역 현안 사업 시행 용이
- 지역인재-일자리 정책 등 혁신도시 시즌2 사업 등
- 총 재정투입 계획: 국비, 지방비, 민자 등 2018년에서 2020년 153.1조원 투입

○ 국가균형발전 전략 성공 혹은 실패?

- 과거의 사례에서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원 효과, 지역산업정책, 지역일자리 정책, 지역 인프라 구축 효과에 대해, 학계는 저평가: 지역에서의 혁신역량 부재, 혁신생태계 조성의 난항 등으로 국가균형발전 효과 미비
-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

○ 혁신도시 시즌 1 성과 평가

- 물론 공공기관 이전 초기의 혁신도시는 여러 가지 난제들 속에서 국가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또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러기 가족 현상이나 좋은 인재가 이전된 공공기관에 입사하지 않으려는 현상 등, 여러 난제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8월 7일 ‘2019년 상반기 10개 혁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 기업 17곳이 혁신도시로 입주하여, 총 1017개사로 확대
- 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성 분석” (2015)의 보고서에 의하면, 공공기관과의 R&D 네트워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

고하고 있음

- ▷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는데, 단순한 인적 네트워크, 거래 네트워크, R&D 네트워크, 이 중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질적 수준이 가장 높음
-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크게 기여: 부산의 사례 금융공기업 내에서 부산 이전 이후 단일 대학 기준으로 부산대학교 출신자의 신규 고용 숫자가 가장 많음
- ▷ 2010년 이후 48.7%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비율, 2015년 51.5%로 약 3% 포인트 증가: 지속 꾸준히 성장
- ▷ 지역 인재 채용 비율 지속 증가: 2010년 5.6%에서 2014년 9.0%로 증가
- ▷ 전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지역인재 비율이 증가, 그 중에서 부산의 경우 2014년 현재 지역인재 고용비율은 14.9%로 가장 높으며, 2018년에는 정규직 10명 가운데 3명을 지역 대학 출신으로 뽑아 목표 채용률 30% 달성
- ▷ 시간이 갈수록, 특히 신규 고용자의 경우 많은 경우 미혼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음: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지역 정착 비율이 자연스럽게 향상
- 도시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증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경제 효과 창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에서 혁신도시 시즌2는 발표하였지만,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음

○ 혁신도시 시즌 2에서의 정책효과 향상 방안

-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 혹은 특색 있는 명품도시 등과 같은 큰 그림 속에서 혁신도시 조성 필요
- ▷ 시즌 1에서는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 단순 택지 조성, 건물 건설, 주택단지 조성 등에 치중한 측면, 말만 혁신도시지 혁신성의 가미가 미비
- ▷ 따라서, 시즌 2에서는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라는 큰 그림 속에 도시가 조성되어야 함
- ▷ IOT,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새로운 혁신 도시 조성 가운데 잘 구현될 수 있는, 최첨단 혁신 기술이 도시의 곳곳에 내재될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해야 함

- ▷ 특히, 싱가포르의 도시환경을 벤치마킹해서, 혁신도시 시즌 2에서는 명실공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특색있는 명품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도시 계획 수립 필요: 스마트 문화, 놀이 공간, 지능형 교통서비스,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등
- 민간 기업 유치, 협력 방안 필요
 - ▷ 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성 분석” (2015)의 R&D 네트워크 분석에 의하면 시즌 1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들과는 어느 정도 틀을 형성해가지만,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상당히 미흡함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 민간 기업 활성화로 연계되어야, 혁신생태계 조성이 가능
 - ▷ 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협력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 시 가산점 부여, 강화 방안도 검토 필요
- 시즌 2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채용의무 비율을 시즌 1과 동일 적용하는 것은 유보
 - ▷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 ▷ 지역 대학에서 시즌 2에 이전할 공공기관에 공급할 인력 양성 시간 필요 등
 - ▷ 시즌 1에서와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채용 비율을 조금씩 상향조정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토론회

장동호(충청남도 내포신도시발전과장)

-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에서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주최하여 주신 한국지역경제학회와 전국혁신포럼에 감사드리며, 행사를 주관하여 주신 윤 황 충남연구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최근 충남의 최대 정책이슈로 혁신도시지정이 대두되고 있음, 오늘(8월 13일 13:30) 내포신도시(충남도청)에서는 충남혁신도시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되었음
 - 충남도민들은 혁신도시지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의 자존심과 연결될 문제로 반드시 혁신도시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러한 충남도의 염원과 같이 이민원 대표님, 홍길중 교수님, 오용준 박사님의 좋은 발표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충남에도 혁신도시의 지정이 필요하고,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여 환황해권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국토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며, 개발축을 경부축에서 동서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
 - 충청남도의 입장을 발표자님들께서 잘 대변하여 주시고 계신 것 같아 큰 힘을 얻게 되었음.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견제시를 부탁드립니다
- 혁신도시 지정시 충남이 제외된 이유는 참여정부 역점시책으로 추진되었던 혁신도시와 행복도시(신행정수도) 지정시, 행복도시로 입지가 확정(2004년)된 지역이 충남의 관할이었던 연기군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에 2개(행복도시, 혁신도시)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정책 때문이었음
 - 충남에서는 행복도시 위치가 연기군으로 결정됨에 따라, 당연히 충남의 관할에 행복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이견 없이 계획수립이 추진되었음
 - 계획수립중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 결정과정과 정권이 바뀌면서 행복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행복도시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2012년)로 분리하게 됨

- 결과적으로 충남도는 행복도시(연기군지역)가 별도의 자치단체인 세종시로 분리됨에 따라서 인구는 9만6천명, 관할면적은 400km²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의한 스푼오버 현상으로 인하여 충청권이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여 충남과 대전지역에서 세종시로 급격하게 인구와 경제가 빨려 들어가고 있음
- 일부에서는 충청지역에 세종시라는 혁신도시보다 큰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 크게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충남의 입장에서는 인구와 토지를 세종에 넘겨주고 현재도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의 지정을 요구하는 것이 일종의 푸념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
- 충남도에서는 2005년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 있던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신도시조성 대상지를 검토하면서, 행복도시가 연기군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충남의 균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원거리인 내포신도시(홍성·예산지역)로 결정
 - 내포신도시는 지방주도형 혁신도시 성격의 신도시로 1997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인구 10만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2012년말 충남도청이 이전하였고, 2019년 7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관련 유관기관·단체 100여개가 완료되었으나, 유입인구는 약 2만5천명으로 도시활성화에 한계 노정
 - 이러한 현상은 내포도시 자체의 문제점도 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 혁신도시의 부재 등에 따른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충남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혁신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과정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임
- 충남도에서 혁신도시지정을 위하여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개정(안)이 국회 상임

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혁신도시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 성과를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도록 할 계획임
- 이 자리에 계신 발표자님들과 토론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기 부탁

○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한국지역경제학회와 전국혁신포럼, 충남연구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혁신도시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 토론회

정운선(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 혁신도시 시즌 2

□ 혁신도시의 롤모델 : 오송 생명과학단지

- 오송이 BT산업 특화지역(생명과학단지)으로 개발중이었으나, BT관련 기업 유치가 지지부진하였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국, 국립보건연구원, 독성연구소 등 BT 관련 정부기관이 오송으로 이전확정된 후 153개 BT관련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입지
- 오창 과학산업단지까지 분량이 완료되는 기업집적 효과발생
- 오송 생명과학단지로의 정부기관 이전과 관련 산업집적이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롤모델이 됨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매개로 이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지역발전의 교두보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목표였음
- 혁신도시는 분야별 공공기관, 이와 관련된 업종의 기업이 집적되어 지역 대학의 인재를 채용함은 물론 지역에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을 성장시키는 모델임
- 광주-나주 혁신도시가 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협력업체가 집적하는 혁신도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

- 이전기관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가 전제되어야 함
- 현재 한국전력이 이전한 나주혁신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전한 진주혁신도시는 이외에는 기업유치 효과 미미

□ 혁신도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 혁신도시는 균형발전사업의 근간이 되는 지역산업정책, 지역일자리정책, 지역대학육성정책의 주요한 통로
-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채용(30%)하고 있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입을 막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지역대학 육성)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역소재 대학이 유리하며 인재의 지역대학유입으로 지역대학이 활성화되는 효과
-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연구소, 지역대학이 연계하는 산학연 연계협력 및 산합융합 효과 기대 가능
- (도시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주된 목표는 이전공공기관과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도입 취지임
-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업종의 기업유치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 및 예산이 집행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배제성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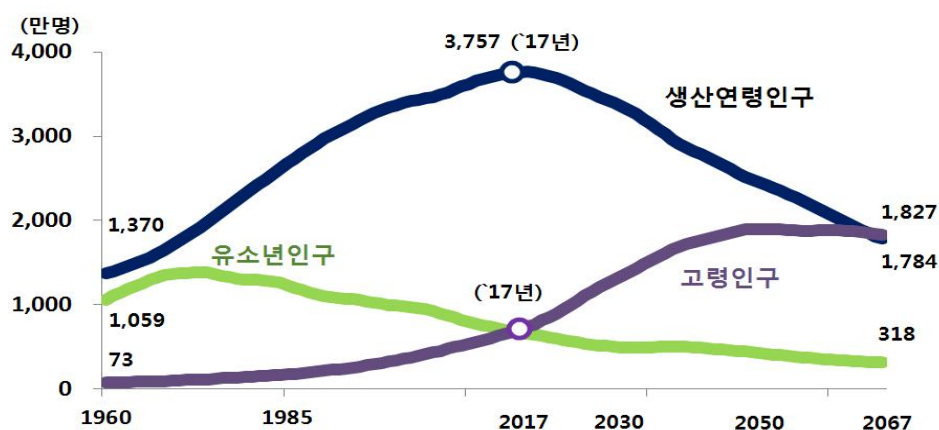
- (충청권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여러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지역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정책
-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특정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혁신도시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거나 세종시에 인접한다하더라도 비수도권이 가지는 균형발전의 문제가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

3 지역과소화의 효율적 대안

□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수도권 집중

-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19년부터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
- UN이 발표한 합계출산율(2017년 기준)도 1.05로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¹⁾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7년 13.8%(707만명), 2025년 20.0%(1,000만명), 2050년에는 40%(1,901만명)를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
-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다시 8년 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²⁾.
- 2008년 2,418만5,787명(전체 인구의 48.82%)이던 수도권 인구가 2018년 49.78%, 2019년 6월 기준 2,587만3,346명(49.91%)으로 전체 인구의 50%까지 수도권 인구 증가.

[그림]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3.28

1) UN(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2)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일본 24년이 소요되었다.

□ 지역의 빠른 과소화

-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과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250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 지자체로 39%에 달함
- 2013년 조사시 75개 지자체보다 14개 지자체가 증가한 결과로 지방소멸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음

□ 일본의 지방도시 육성사례

- 일본은 1990년부터 버블이 가라앉기 시작하였고, 1995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당시 1인당 소득은 4만불, 출생율은 1.4명이었음.
-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빠른 인구감소로, 도시가 소멸되기 시작하였음
- 2014년 8월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는 인구유출로 2040년까지 1,727개 시구정촌 중 896개가 소멸하고, 이중 523개는 인구 1만명 이하라는 지방소멸론을 주장³⁾.
- 일본정부는 1억 명의 인구 유지를 최대정책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지방창생 관련 주요 정책으로 장기비전과 종합전략으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종합전략’ 수립
- 지역도시육성, 지역일자리 창출에 사업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음, 미치노에끼사업, 지역부흥대사업, UIJ턴 사업 등은 지역일자리와 청년이주를 촉진하는 지방도시육성사업

□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수도권 집중의 대안

- 혁신도시는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수도권 집중의 효과적인 대안이며 수도권으로 인력, 자본유출이 가장 심한 충청권에 효과적인 정책

3)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론은 마스다히로야(2014), 増田寛也(2015), 増田寛也·富山和彦(2015), 増田寛也·河合雅司(2015) 등으로 출간

- 도시는 생명체와 같아서 혁신도시 정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임
- 현재 혁신도시가 인구증가, 정주환경, 기업집적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거나 확장되지 않는 논리가 되는 것은 모순
- 정주환경 개선, 기업집적, 인구증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지원하고 확대하는 것이 지역과소화를 막는 중요한 정책